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국회기록원 설립의 의미와 재해석

: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2026.5.29

한남대학교 사학과 양인호



CONTENTS

- I 머리말
- II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 III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
- IV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 V 맺음말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이후 AI는 사회 전반의 업무 방식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 역시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세돌 9단 “무력한 모습 보여 죄송…알파고의 능력 오판”(동아일보, 2016.03.12)

스스로 바둑 깨우친 ‘알파고 제로’...AI ‘새 이정표’(전자신문, 2017.10.19)

챗GPT 파급효과 어디까지?...정부, AI 전략 ‘고심’(연합뉴스, 2022.12.28)

챗GPT는 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까[궁금한AI](이데일리, 2023.03.11)

AI와 로봇의 혁신 기술 ... '제13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코엑스서 개최(동아일보, 2024.06.18)

MS, 직원 평가에 AI 활용 평가 도입...”AI 사용은 선택 사항 아니야”(AI TIMES, 2025.11.16)

직장인 62% “AI 활용 능력 따라 연봉 격차 10% 벌어 질 것”(중앙일보, 2026.03.04)

이세돌 “알파고, AI 시대 미리 보여준 사건”(연합뉴스, 2026.03.11)

1. 머리말

국가기록원은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AI 관련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지능형 검색, 비식별화,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등 기록관리 전 과정에 AI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번호	연도	연구과제명
103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 모형 연구
104	2021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 적용 방안 연구
105	2021	기록물 OCR 데이터셋 구축 및 한글 필기체 인식 성능 개선 연구
106	2021	기록관리 AI 기술적용을 위한 공통 학습데이터 세트 구축 연구
107	2021	보존 종이 기록물 부착미생물의 유해성 분석 및 소독 관리 고도화
108	2021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09	2021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학 기록관리 표준모델 연구
110	2022	웹기록물 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111	2022	전자기록 생산·활용 환경을 고려한 국가기록분류체계 모델 개발 연구
112	2022	국가기록물 검색 고도화를 위한 검색시스템 및 검색기법 연구
113	2022	디지털 속성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114	2022	민간 아카이브 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형 아카이빙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115	2022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모형 연구
116	2023	기록관리 통합플랫폼 개념 모델 설계 연구
117	2023	시청각 및 데이터세트 유형 보존포맷 선정기준 개발 및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체계 구축 연구
118	2023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능 도출 및 보존·재현 방안 연구
119	2023	시청각 유형별 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및 메타데이터 체계 재구축 연구
120	2023	중요문서용 기록용지 표준화 및 시제품 개발연구

번호	연도	연구과제명
121	2024	지능형 기록정보 서비스 모델 설계 및 구현방안 연구
122	2024	국가중요기록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기획연구
123	2024	기록물관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124	2025	오픈 포맷을 활용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 방안 연구
125	2025	AI를 활용한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및 비식별화 서비스 모델 연구
126	2025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의 방사선 소독처리 실증 연구 및 체계 구축
127	2025	시청각기록물 AI 활성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분류체계 연구

국가기록원 '25년 주요 성과(일부발췌)

□ AI 인프라 및 학습 데이터 구축 여건 조성

○ (성과) 범정부적 AI 데이터 사업 선정·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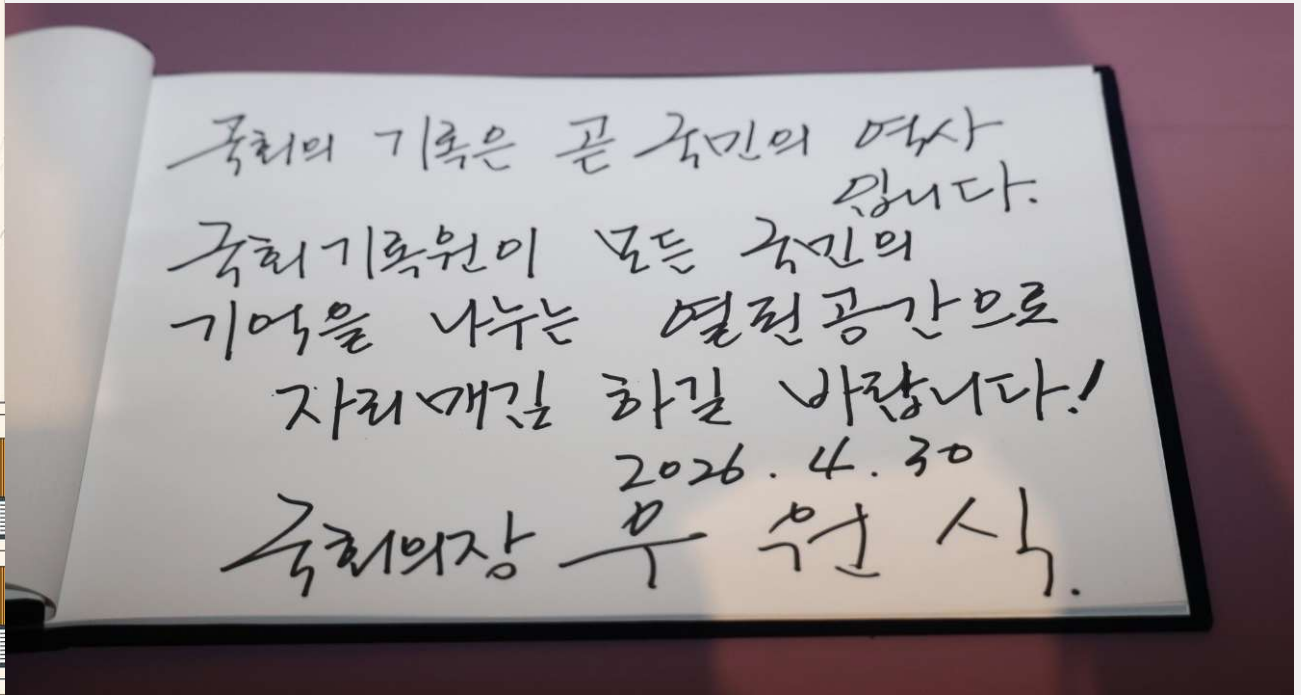
-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개발(대화형 기록정보 검색 및 UI/UX 개발) 및 소장기록물 AI 학습데이터 구축·적용(750만건, 과기부-NIPA 지원사업, 총 18억(25년 9억, 26년 9억))
- 과기부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25~27)하고, '25년에는 기록물 유형별 샘플데이터 제공·전처리 테스트 완료
- '25년 기록물 디지털화(스캐닝) 3.8만철, 데이터화(OCR 변환) 3.7만철 실시
(디지털화 실적 누계, '19년~'25년) 전체 소장량 681만철 중 127만철(18.7%)
(데이터화 실적 누계, '23년~'25년) 전체 127만철 중 9.6만철(7.6%)

○ (정책여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시대, 기록서비스(맞춤형 기록 서비스 등)확대 등 혁신 요구 증가

⇒ 고품질 AI 학습데이터 제공 지속 확대 및 AI 기반 서비스 강화 필요
(국가기록포털, 공공부문 내 활용시스템)

1. 머리말

2026년 4월 30일, 국회기록원이 공식 개원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명록에 "국회의 기록은 곧 국민의 역사"라고 적었다. 이 문구는 국회기록원 설립이 지닌 민주주의적 의미를 압축한다.



1. 머리말

2026년 1월 「국회기록원법」 시행은 단순한 기관명 변경이 아니다. 직급 격상, 독립성 확보, 인력 2.4배 확대, 전문성 확보, 원장 및 실장 전문직 임명 등 기록관리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아카이브에서 ‘독립성’을 갖춘 ‘차관급’ 위상을 지닌 기관이 드디어 출범한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법」 시행

국회기록원장의 직급은 기존 부이사관(국회기록보존소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국회도서관 소속기관에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개편되어 직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27명에서 66명으로 약 2.4배 확대

기록학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초대 국회기록원장으로 임명(2026.01.28)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실장(이사관) 전자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채용

초대 국회기록원장은 취임사에서 기관의 시대적 소명과 4가지 전략방향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국회기록원이 지향하는 아카이브의 역할과 방향을 이념적으로 집약한 공식 문서이다.

국회기록원장 취임사(일부 발췌)

국회기록원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증거하고 기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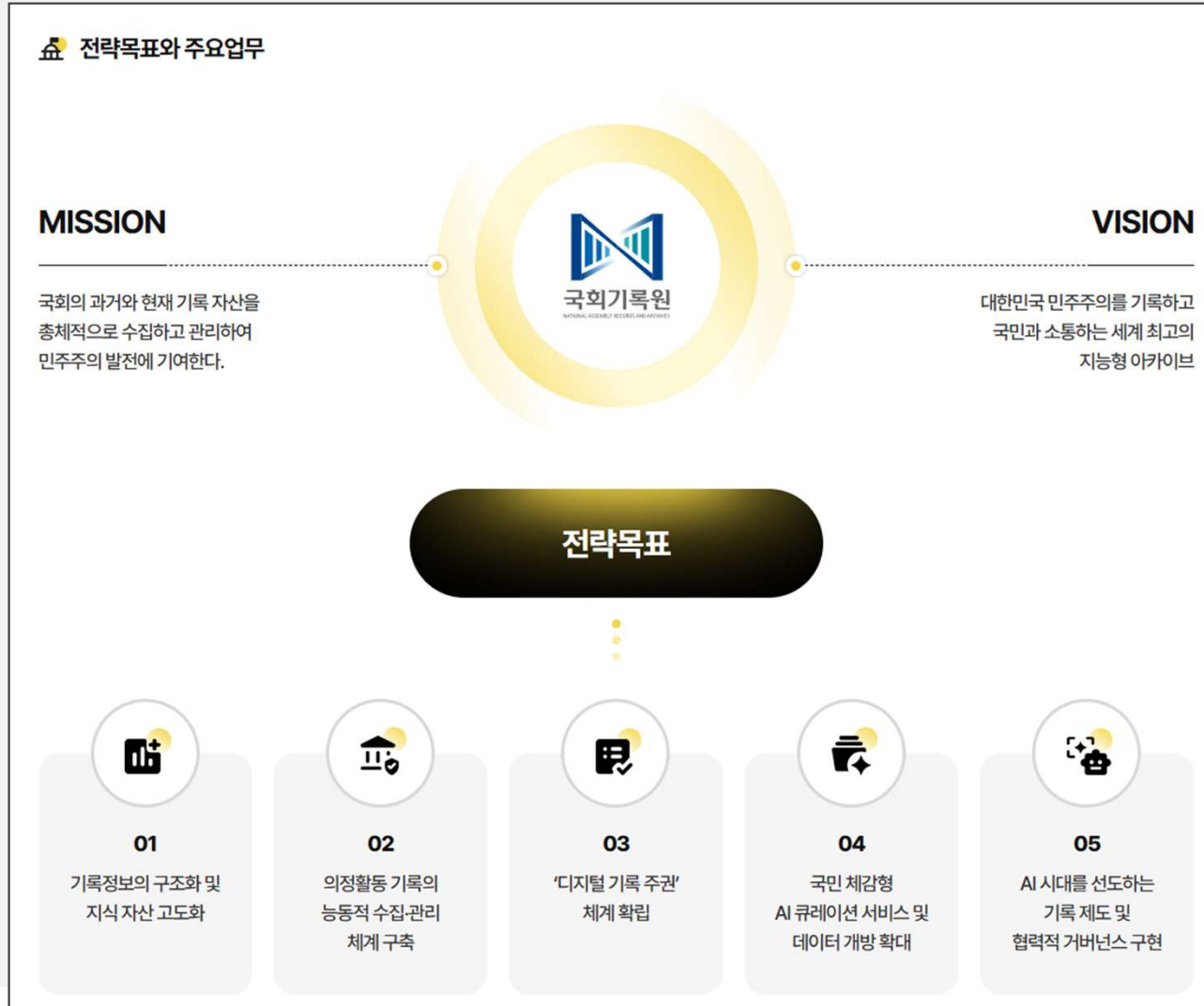
둘째, 국회의장단, 국회의원, 정당 기록의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국회기록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기억저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리말

취임사의 이념은 비전·미션과 5개 전략목표로 구체화된다. 1부터 5까지는 기록 구조화, 능동적 수집, 디지털 주권, 국민 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라는 상호 연계된 실행 체계를 형성한다.



1. 머리말

본 발표는 국회기록원 설립을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석한다. 취임사와 전략목표 간의 대응 구조 분석을 통해 이 전환의 논리와 구조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향의 제시를 넘어, 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 운영 구조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취임사와 전략목표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록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데이터이자 서비스 자원으로 재정의
- 생산 이전 단계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카이브가 개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전제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기록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와는 다른 새로운 운영 체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국회기록원 설립을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아카이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

이에 본 발표는 국회기록원 설립 이후 제시된 취임사와 비전·미션, 전략목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통적 아카이브 모델에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아카이브로의 전환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국회기록원장 취임사에 나타난 이념적 지향과 전략목표 간의 대응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아카이브 전환의 논리와 그 구조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CONTENTS

- I 머리말
- II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 III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
- IV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 V 맺음말

2.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적 아카이브는 기록의 진본성·무결성 보존을 본질적 임무로 삼아왔다.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이전, 의회기록관리는 원칙도 없이 분산·방치되었고 회의록 중심의 협소한 인식에 머물렀다.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 및 역할

- 개인, 기관, 또는 사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 중 영구적 보존 가치를 지닌 것을 선별·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관 또는 그 기록물 자체를 지칭(한국기록학회, 2008).
- 전통적 의미에서 아카이브는 기록의 진본성(authenticity)과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기능
- 랑케의 실증사학 “사실 그대로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기록학은 아카이브의 본질적 임무를 기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인식(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24, 4).
- 이에 따라 아카이브는 기록의 생산 맥락(provenance)을 유지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이전

- 의회기록은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이전부터 주로 ‘회의록’ 중심으로 협소하게 인식되는 측면
- 의회기록의 특성에 맞는 관리 원칙이나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채 행정부의 관리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
- 기록 성격에 따라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웠고, 기록은 지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소장 기록물의 약 73% 이상이 준영구 이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승일, 2008, 52)

2.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2000년 설치 이후 소속과 위상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기반의 안정적 운영보다 조직 편의에 따른 재편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 및 기능에 가장 큰 한계로 기반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 설치(2000.1)

연도	주요내용	소속
1999.11	·국회사무처직제 전부개정 ·국회기록물관리 개선(안) 마련	-
2000.1	·국회기록보존소 설치	국회사무처
200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정	국회사무처
2002	·국회기록물관리 내규 제정	국회사무처
2009.4	·국회도서관 직제 및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 ‘헌정기록관리’는 홍보기획관(현 문화소통기획관)으로, ‘정보공개업무’는 의정종합지원센터(현 민원지원센터)로 재분장	국회도서관
2011.4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	국회도서관
2013.12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국회도서관
2016	·국회도서관법 개정(제2조)	국회도서관
2017.6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 통합 TF팀 구성	국회도서관

(양인호, 2026, 10)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변경”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회도서관’으로 지정”

“국회기록보존소 과에서 국으로 승격”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을 국회도서관의
직무에 포함”

국회기록보존소의 문제는 개별 기능의 미비가 아니라 구조 설계 자체의 한계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제도, 데이터형 기록관리, 이용자 서비스, 의정·정당기록 관리 등 네 차원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 네 가지 한계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 기능의 한계

① 조직·제도적 한계

- 국회도서관 편입이 전문성 종속 야기 - '구조적 퇴행'(김유승, 2011)
- 낮은 직제 위상 → 지도·감독권 공백 · 구조적 과부하 (중앙대 산학협력단, 2017)
- 기록관리위원회 내부 인사 중심 폐쇄 운영, 정책 논의 부재
- 정보공개규정 비공개 기준의 포괄성·보호성 - 알 권리 제한(김유승, 2022)
-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능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행정 논리와 조직 운영 구조 속에서 형성된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

③ 이용자 서비스 및 기록 접근성의 한계

- 설립 후 15년간 독립 웹사이트 미운영, 텍스트 단순 검색 수준
- 기록 정보와 실제 의정활동 간 연계 서비스 부재
- 파편화된 기록의 주제별 조사·연구 가이드 부재(성면섭·김장환, 2022)
-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기초 목록 중심 → 일반 이용자 접근성 저해 (여상아, 2022)
- 기록정보의 지식자산화나 관계적 연계나 활용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논의가 현실적으로 시도조차 되기 어려운 환경

② 데이터형 기록관리체계의 한계

- 국가기록원 RMS 커스터마이징 수준의 임시 체계 - 데이터세트·웹기록 포괄 불가
- 전문 기술인력 부재 → 시스템 적시 개선 불가
- 범용 메타데이터 표준 미비, 기술·시청각 자료 수용 한계
- 생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불일치 → 데이터 고립 반복(네이버시스템, 2015)
- 데이터형 기록을 중요한 기록 자산으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정책적·재정적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

④ 의정활동기록과 정당기록 관리의 한계

- 국회의원 기록: 공공기록물법 적용 제외 → 임기 종료 시 대량 파기 (김장환, 2018)
- 의원실 기록관리: 비전문 행정인력 담당, 인수인계 부재, 기록의 무분별한 폐기 고착화
- 정당기록: 「국회기록물관리규칙」상 관리 대상 제외
- 정당 평균 수명 3년 27일 → 소멸 시 기록 함께 소멸 위험(중앙대 산학협력단, 2017)
- 의정기록의 사적·정치적 자산 인식과 정치적 악용 우려에 따른 방어적 태도(장연화·윤은하, 2024)



CONTENTS

- I 머리말
- II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 III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
- IV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 V 맺음말

국회의장은 개원식 축사에서 기록의 사회적 의미와 기관 설립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축사는 국회기록원에 부여된 민주주의적 책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문서로서 기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기록원 개원식 축사(일부 발췌)

기록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여는 길잡이입니다.

국회기록물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회기록원 설립입니다.

국회기록원 출범은 국가 기록관리 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관리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가장 높은 차관급 기관장을 둔 기관입니다. 국회가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기록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기록원 개원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기록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축사의 핵심어는 ‘기록’, ‘민주주의’, ‘독립성·전문성’, ‘공공 플랫폼’으로 수렴된다. 이 키워드들은 국회기록원이 단순한 보존 기관을 넘어 민주주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기록원 개원식 축사(일부 발췌)

기록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여는 길잡이	➔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 자산
‘독립성’과 ‘전문성’	➔	국회의장 직속 기관 / 원장·실장 전문직 임명
차관급 기관장을 둔 기관	➔	국가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전환점	➔	제도적 인프라, 공공 플랫폼으로의 위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	➔	민주주의 발전의 제도적 인프라이자 공공 플랫폼

취임사(I)는 기관의 이념을, 전략목표(S)는 그 이념의 실행 지향을 담는다. 두 문서의 대응 구조를 분석틀로 설정함으로써 국회기록원이 추구하는 아카이브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3.1 분석틀: 취임사(I)와 전략목표(S)의 대응 구조

취임사: 대내외에 공표된 기관의 공식 이념으로서 국회기록원의 향후 방향과 철학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음

전략목표: 이러한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관의 기능과 구조적 차원에서 설정된 실행 지향적 목표

- 두 개념을 하는 작업은 국회기록원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
- 이를 위해 취임사(I)와 전략목표(S) 간의 대응 구조를 분석틀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분석틀이 갖는 의미

- 첫째, 취임사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수사적 선언에 그칠 수 있는 내용이, 전략목표와의 대응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념의 구체화 가능성과 일관성을 살펴볼 수 있음
- 둘째, 전략목표를 단독으로 살펴보면 기술적·행정적 과제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취임사의 이념과 연결될 때 각 과제가 국회기록보존소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인지를 정리할 수 있음.

한계

- 취임사와 전략목표는 국회기록원 출범 시점에 생산된 문서이므로,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구현 여부와는 별개일 수 있음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취임사 13개 항목은 비전·미션·핵심가치·전략·실행과제의 위계로 구조화된다. 각 항목은 고유 코드(I-n)로 식별되며, 전략목표와의 대응 관계를 통해 이념의 구체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3.2 취임사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방향

코드	구분	주요 내용	핵심키워드	대응 전략목표
I-1	Vision	국회기록원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증거하고 기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증거 기록, 세계 최고, 의회 아카이브	B (비전)
I-1-1	Mission	국회기록원은 우리시대 의회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록과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의회 기록 기억, 민주주의 시대정신	A (미션)
I-1-2	핵심가치	기록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여, 국회의 설명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국민 소통, 설명책임성, 투명성	S-4
I-2	Strategy 1	「의정활동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정체성 확립	S-2
I-2-1	Action	기록 활용 기반의 의정활동 지원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록 활용, 현장 밀착, 의정활동 질	S-1
I-3	Strategy 2	국회의장단, 국회의원, 정당 기록의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장·의원·정당 기록, 수집·관리 체계	S-2
I-3-1	Action	기록관리 컨설팅 등 기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기증을 유도하여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컨설팅, 기증 유도, 국가적 자산	S-5
I-4	Strategy 3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AI 기술, 디지털 전환	S-3
I-4-1	Action	「AI 네이티브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AI 네이티브,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S-1
I-4-2	Action	미국 NARA·영국 TNA 등에서 AI 기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 아키비스트와 AI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NARA, TNA, 아키비스트-AI 협력	S-5
I-5	Strategy 4	국회기록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기억저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기억저장소, 국민 참여	S-4
I-5-1	Action	헌정사를 복원하고, 민주주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사편찬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헌정사 복원, 민주주의 연구	S-2
I-5-2	Action	기록과 박물관을 융합한 ‘아키비움(Archiveum)’ 모델을 구현하고, ‘국회 기록 비엔날레’를 개최해서 기록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아키비움, 비엔날레, 기록-박물관 융합	S-4
I-5-3	Action	12·3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기록화하여 국회기록원을 민주주의 교육의 상징 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기록화, 민주주의 교육	S-4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전략목표 S-1~S-5는 비전·미션과 연결되며 취임사의 이념 항목과 구체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과제의 나열이 아닌 이념의 실행 체계로서, 각 목표의 구조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3.3 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구조적 지향

코드	구분	주요 내용	핵심키워드	대응 취임사 항목
A	미션	국회의 과거와 현재 기록 자산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총체적 수집·관리, 민주주의 기여	I-1-1
B	비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기록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세계 최고의 지능형 아카이브	민주주의 기록, 국민 소통, 지능형	I-1
S-1	전략목표 1	기록정보의 구조화 및 지식자산 고도화	데이터 구조화, 지식자산화, 메타데이터	I-2-1 / I-4-1
S-2	전략목표 2	의정활동 기록의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 구축	능동적 수집, 의정활동 지원, 사전 개입	I-2 / I-3 / I-5-1
S-3	전략목표 3	디지털 기록 주권 체계 확립	디지털 주권, 기록 통제력, 보안	I-4
S-4	전략목표 4	국민 체감형 AI 큐레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AI 큐레이션, 데이터 개방, 국민 체감	I-1-2 / I-5 / I-5-2 / I-5-3
S-5	전략목표 5	AI시대를 선도하는 기록 제도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AI 기록 제도, 협력 거버넌스, 생태계	I-3-1 / I-4-2

※ 출처 : 국회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nara.go.kr/introduceOrganization/organizationBusiness.do?curr_menu_cd=0114010100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6.5.18.)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매트릭스는 취임사 이념 항목이 전략목표로 구체화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I-1·I-1-1은 이념과 비전·미션의 일치를 확인하며, I-1-2·I-2·I-2-1은 기능 전환의 논리적 연결 구조를 드러낸다.

3.4 취임사-전략목표 대응구조

취임사코드	취임사 핵심 내용	대응 전략목표	전략목표 내용	대응 논리	전환유형	비고
I-1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아카이브 구축 (대한민국 민주주의 증거기록)	B(비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기록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세계 최고의 지능형 아카이브	취임사의 핵심 시대적 소명이 기관 비전으로 직접 구현됨. 이념과 비전의 일치 확인	역할	이념→비전
I-1-1	의회 기록·기억 보존 및 민주주의 시대정신과의 호흡	A(미션)	국회의 과거와 현재 기록 자산을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의회 기록의 총체적 수집·관리라는 미션이 민주주의 기록화 이념을 실행 선언으로 구체화	역할	이념→미션
I-1-2	기록 매개 국민 소통, 설명책임성·투명성 강화로 민주주의 진전 [핵심가치]	S-4	국민 체감형 AI 큐레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설명책임성·투명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AI 큐레이션과 데이터 개방이 가능함	이용구조	공공성→서비스화
I-2	의정활동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단순 보존소 탈피)	S-2	의정활동 기록의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 구축	보존 중심에서 의정지원 기능 중심으로의 전환 선언이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로 구현됨	기능	보존→지원 기능
I-2-1	기록 활용 기반 의정지원·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의정활동 질 향상	S-1	기록정보의 구조화 및 지식자산 고도화	활용 기반 의정지원을 위해서는 기록정보의 구조화·지식자산화가 선행 조건이 됨 (수단-목적 관계)	기능	활용→구조화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I-3과 I-3-1은 프로세스 전환, I-4와 I-4-1·I-4-2는 기술 전환의 대응 논리를 담는다.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은 디지털 주권 확립(S-3)과 기록 구조화(S-1)라는 두 목표에 동시에 연결된다.

3.4 취임사·전략목표 대응구조

취임사코드	취임사 핵심 내용	대응 전략목표	전략목표 내용	대응 논리	전환유형	비고
I-3	국회의장단·국회의원·정당 기록 수집·관리 체계 강화	S-2	의정활동 기록의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 구축	의원·정당 기록의 적극적 수집은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의 핵심 실행 내용에 해당함	프로세스	사후→능동 수집
I-3-1	기록관리 컨설팅, 기증 유도 콘텐츠 제공으로 국가적 자산 보호	S-5	AI시대를 선도하는 기록 제도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컨설팅·기증 유도는 S-5의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과 대응함. 의원·정당과의 개별 협력을 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하는 실천적 방법에 해당함	프로세스	개별→협력체계
I-4	AI 기술 적용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로의 전면 전환	S-3	디지털 기록 주권 체계 확립	AI 기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록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주권) 확립의 기술적 기반	기술	아날로그→디지털
I-4-1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 (인공지능 기반 설계·운영 차세대 시스템)	S-1	기록정보의 구조화 및 지식자산 고도화	AI 네이티브 아카이브는 메타데이터 자동생성·분류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구조화와 지식자산화를 기술적으로 가속화함. I-4(전략)가 S-3(주권)을 지향한다면, I-4-1(실행)은 S-1(구조화)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함	기술	AI→구조화 가속
I-4-2	NARA·영국 TNA 등 해외 AI 아카이브 사례 참조 및 아키비스트-AI 협력 모델	S-5	AI시대를 선도하는 기록 제도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해외 협력 모델 벤치마킹은 AI시대 기록 제도 및 국제 거버넌스 구현의 근거로 작동	기술	국제협력→제도화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I-5와 하위 항목들은 이용구조 전환의 대응 논리를 담는다. 민주주의 기억저장소, 아키비움, 비엔날레, 현장 기록화 등의 구상이 S-4(국민 체감형 AI 큐레이션 서비스)로 수렴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3.4 취임사-전략목표 대응구조

취임사코드	취임사 핵심 내용	대응 전략목표	전략목표 내용	대응 논리	전환유형	비고
I-5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기억저장소' 구현	S-4	국민 체감형 AI 큐레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민주주의의 기억저장소라는 이념이 AI 큐레이션-데이터 개방이라는 서비스 체계로 구현됨	이용구조	전문→시민 개방
I-5-1	헌정사 복원, 민주주의 연구 지원, 역사편찬기관 역할 강화	S-2	의정활동 기록의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 구축	헌정사 복원 및 역사편찬기관 역할은 역사적 의정기록을 능동적으로 발굴·수집·정리·편찬하는 것으로, S-2의 능동적 수집관리 체계의 역사기록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	역할	보존→능동편찬
I-5-2	아키비움(Archiveum) 모델 구현, 국회 기록 비엔날레 개최	S-4	국민 체감형 AI 큐레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아키비움·비엔날레는 기록 매개 국민 소통의 체감형 서비스 실현 형태에 해당함	이용구조	전문→체험공간
I-5-3	12·3 비상계엄 등 민주주의 현장 기록화, 민주주의 교육 상징 공간 육성	S-4	국민 체감형 AI 큐레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현장 기록화·교육 공간화는 체감형 서비스의 사회적 확장 형태로 공공성을 극대화함	이용구조	기록→교육공간

3.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에 나타난 아카이브의 역할과 구조

결과적으로 취임사-전략목표 대응 분석은 다섯 가지 전환으로 수렴된다. 기능·역할·프로세스·기술·이용구조의 동시적 재편은 국회기록원이 지향하는 새로운 아카이브 체계의 구조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3.4 취임사-전략목표 대응구조

1	기능 전환	보존기관	→	의정활동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의 '보관자' → 의정활동의 '파트너' • I-2·I-2-1 → S-1·S-2
2	역할 전환	기록관리기관	→	민주주의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정체성 재정립(re-positioning) • 비전·미션의 공통 키워드 '민주주의'
3	프로세스 전환	사후 관리	→	능동적 수집·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 의존 수동적 수집 → 생산 단계부터 개입 • I-3·I-5-1 → S-2
4	기술 전환	물리적 보존 공간	→	데이터·AI 기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설계부터 AI 기반 재구성 • I-4·I-4-1·I-4-2 → S-1·S-3·S-5
5	이용구조 전환	전문가 중심 제한 이용	→	시민 참여·공공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비움·비엔날레·교육공간 등 구체적 프로그램 • I-1-2·I-5~I-5-3 → S-4



CONTENTS

- I 머리말
- II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 III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
- IV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 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전환은 각각 독립된 정책 변화라기보다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된다. 취임사와 전략목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AI 네이티브 아카이브’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록의 생산·관리·활용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4.1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개념과 국제 동향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전환은 각각 독립된 정책 변화라기보다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됨

- 취임사와 전략목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AI 기반 기록체계의 구축(AI 네이티브 아카이브)’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기록의 생산·관리·활용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의미

- AI 네이티브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AI를 기존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운영·유지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구조를 지칭
- 즉, AI-native는 기존 시스템에 AI 기능을 사후적으로 추가·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AI의 처리 방식과 데이터 구조를 핵심 운영 원리로 전제한 체계를 의미이며, 이러한 개념을 아카이브 영역에 적용한 것이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 기존의 ‘AI 도입(AI adoption)’이나 ‘AI 통합(AI integration)’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시스템 자체가 AI 활용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취임사(1-4-1)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이 개념에 해당

해외의 주요 기록관리기관들은 AI를 기존 체계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록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취임사 1-4-2에서 이들 사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개념과 국제 동향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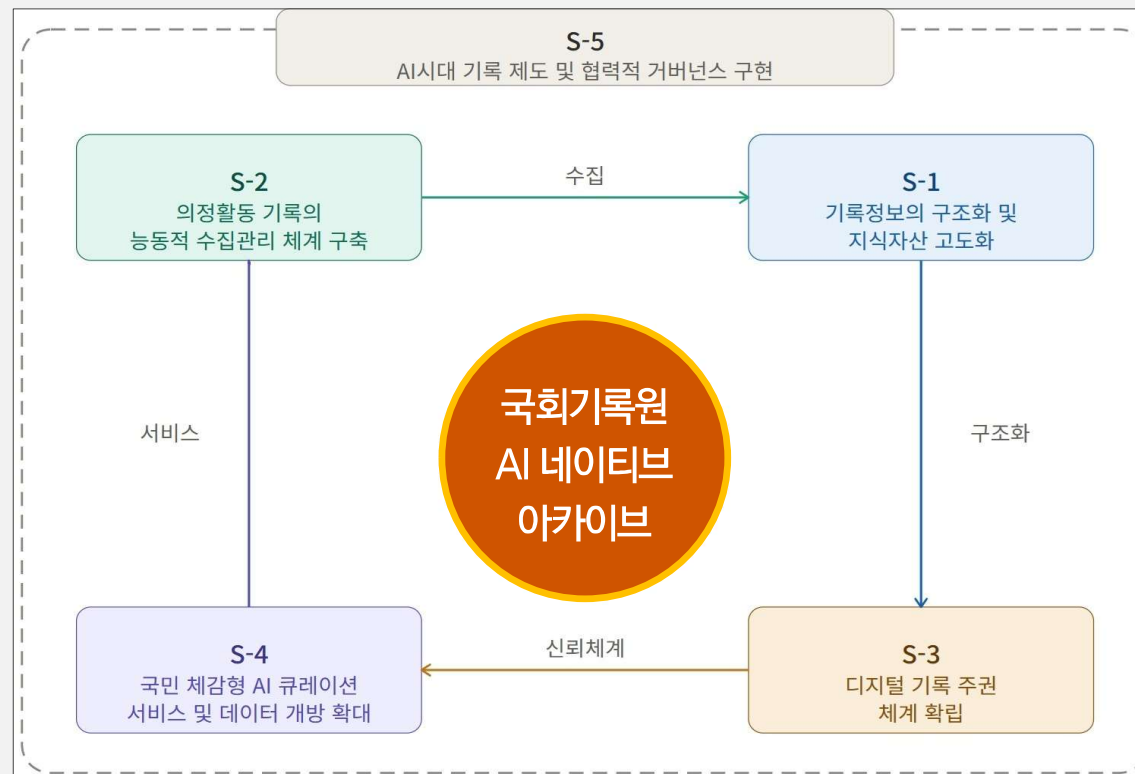
- 미국 국립기록보관소(NARA)는 2025년 기준 14개의 AI 활용 사례를 운영 또는 시범 추진 중이며,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의미 기반 검색(ArchiAI), 개인식별정보(PII) 자동 탐지, AI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통해 기록관리의 전 과정을 AI 기반으로 재구성(NARA, 2025).
- 뉴질랜드 기록보관소(Archives New Zealand)는 AI 기술의 도입이 기록의 생성·수집·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며, 기록의 형성·포착·맥락 이해 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리 기준을 제시(Archives New Zealand, 2023)
- 호주 국립기록보관소(NAA) 역시 AI 생성 기록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기록관리 전 과정을 AI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지침 발표(NAA, 2025).
- 영국 국립기록보관소(TNA)는 2020년 'AI for Selection'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반 머신러닝 도구를 디지털 기록의 선별·평가 업무에 시범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AI는 기록관리자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으나 대규모 디지털 기록 처리를 위한 지원 도구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키비스트-AI 협력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실증하였음(TNA, 2021).

4.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의 의의

전략목표는 개별 사업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상호 연계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능동적 수집 → 구조화·지식자산화 → 디지털 주권 확립 → 국민 체감 서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 전체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4.1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개념과 국제 동향

“전략목표 S-1부터 S-5까지는 각각 분절된 정책이 아니라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상호 연계된 전략”



본 발표는 국회기록원이 지향하는 AI 네이티브 아카이브를 ‘기록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f Records)’라는 개념적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아카이브는 기록이라는 자원을 조직·연결·제공 함으로써 다양한 활동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대응 구조는 다음과 같다.

4.2 ‘기록의 운영체제’로서의 아카이브: 구조화·연결·활용·서비스

‘기록의 운영체제’로서의 아카이브

- 전략목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기록원이 지향하는 AI 네이티브 아카이브를 ‘기록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f Records)’라는 개념적 비유로 설명하고자 함
- 운영체제(OS)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의미
- 이를 아카이브에 비유하면, 아카이브 역시 ‘기록’이라는 자원을 조직·연결·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활동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 국회기록원의 전략목표 또한 기록의 구조화·연결·활용·서비스를 상호 연계된 체계 안에서 운영함으로써 기록 기반의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향함

본 발표의 ‘기록의 운영체제’라는 개념은 AI 환경에서 변화하는 아카이브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비유’

4.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의 의의

운영체제(OS)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매개하듯, 아카이브는 기록과 이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기반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두 체계의 구조적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4.2 '기록의 운영체제'로서의 아카이브: 구조화 · 연결 · 활용 · 서비스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듯, AI 네이티브 아카이브는 기록이라는 자원을 구조화·연결·활용·서비스의 네 층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구분	운영체제(OS)	기록의 운영체제(아카이브)
1	하드웨어 자원 관리	기록·정보·데이터 자원 관리
2	시스템 운영 환경 제공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기반 제공
3	메모리, 파일, 프로세스의 통합관리	구조화·연결·활용·서비스의 통합 운영
4	시스템 관리자와 자동화 기능의 협업	AI와 아키비스트의 협업 기반 운영
5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지원	의정지원·민주주의 기억·국민 서비스 지원
6	사용자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제공	이용자와 기록 간 접근·활용 인터페이스 제공

4.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의 의의

아카이브는 기록이라는 자원을 구조화·연결·활용·서비스의 네 층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네 기능은 순차적이면서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며, 각 층위는 국회기록원의 전략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4.2 '기록의 운영체제'로서의 아카이브: 구조화 · 연결 · 활용 · 서비스

① 구조화(Structuring) → S-1

- 기록을 AI가 이해·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하는 기반
- NARA(2025): AI로 수십억 건 디지털 기록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 TNA(2021): 훈련 데이터 품질이 구조화 성과를 결정
→ 아키비스트의 도메인 전문성이 구조화의 질을 좌우
→ 이후 연결·활용·서비스 기능 가능화의 핵심 층위

② 연결 (Connecting) → S-2

- 분산 기록을 인물·사건·입법과정 맥락으로 연계·관계망 형성
- NARA ArchiAI(2025): 키워드 매칭을 넘어 문서 간 숨겨진
- 맥락 연결 방향으로 기록 검색 구조 변화를 시도
- Archives NZ(2023): AI가 기록의 형성·포착·맥락 이해
-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명시
→ 구조화된 기록이 맥락적으로 연결될 때 개별 기록의 총합을 초과하는 의미 탐색 가능

③ 활용 (Enabling) → S-3·S-5

- 구조화·연결 기반 위에서 AI 자동 분류·평가·이관·
- 보존기간 산정 기능 구현
- TNA(2021): "AI는 기록관리자 전문성을 대체 불가,
- 상업용 AI 도구는 기록 선별 업무 지원에 성공적 적용 가능"
- NAA(2025): AI 생성 기록의 진본성·무결성 확보 원칙 제시
→ AI 환경에서도 안정적 기록 활용 가능
→ S-5 아키비스트-AI 협력 모델 + S-3 디지털 기록 주권 확립

④ 서비스 (Servicing) → S-4

- 구조화·연결·활용의 결과를 이용자 맥락에 맞게 전달하는 기능
- NARA(2025): AI 기반 자동 태깅·개인화 추천·자연어
- 인터페이스 기반 기록 서비스 구축 추진
- 이용자 관심·맥락·패턴 분석 → 능동적 추천·연결
- 지능형 큐레이션 서비스 가능
→ '민주주의 인프라'로서 아카이브 역할 실현의 최전선



CONTENTS

- I 머리말
- II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구조
- III 국회기록원 취임사·전략목표
- IV 국회기록원 설립의 재해석
- V 맺음말

본 발표는 국회기록원 설립을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구현으로 해석하고, 취임사·전략목표가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위에서 설계된 ‘전환 설계도’의 성격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발표는 출범 시점의 공식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이행 수준의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 국회기록원 설립은 단순한 기관 승격이 아닌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구현’
 - 취임사와 전략목표는 한계를 인식한 위에서 설계된 ‘전환 설계도’의 성격
 - 다섯 차원의 동시적 재편이 ‘기록의 운영체제’라는 단일한 설계 원리로 수렴
 - 전통적 보존 중심 → 능동적·지능형·참여형 아카이브로 패러다임 전환임을 확인
 - NARA·TNA·Archives NZ 등 국제 동향과의 정합성 확인
 - 한계: 출범 시점 공식 텍스트 분석 — 이행 수준 검증은 향후 과제

국회기록원이 지향하는 AI 네이티브 아카이브가 현실화될 때, 기록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 시나리오는 3년 후 국회기록원이 구현할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장 개원식 환영사(일부 발췌)

오늘은 국회기록원이 꿈꾸는 3년 후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보좌진이 며칠씩 자료를 찾았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원실 AI 기록 시스템을 검색하자, 지난 20년간 유사한 법안이 어떤 쟁점에서 막혔는지, 어느 회기에서 어떤 맥락으로 통과됐는지, 의원들의 구술기록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자, AI 기록 세트가 한 해 동안 발의한 법안, 상임위 심사 과정, 확보한 예산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정리하여, 주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기록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 현안의 경과와 다음 회기 추진계획까지 담아냅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의정활동을 증거하는 이 보고서는 국회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곳, 그것이 국회기록원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곳, 그것이 국회기록원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 객건홍 (2026. 1. 29). 국회기록원장 취임사. 국회기록원.
- 객건홍 (2026. 4. 30). 국회의장 국회기록원 개원식 환영사. 국회기록원.
- 국회기록원 홈페이지, 출처: https://www.nara.go.kr/introduceOrganization/organizationBusiness.do?curr_menu_cd=0114010100 (2026. 5. 20.)
- 권유진 (2026. 3. 4). 직장인 62% "AI 활용 능력 따라 연봉 격차 10% 벌어질 것". 중앙일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978> (2026. 5. 20.)
-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김유승 (2022).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국회정보공개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 김장환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 김진우 (2026. 5. 20). 국회기록원 개원...禹의장 "민주주의 성숙 전환점될 것". 국회뉴스on, 출처: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16&storyId=2e1bba7e-85e5-4888-91fe-67c41e25f5f0> (2026. 5. 20.)
- 네이버시스템 컨소시엄 (2015). 국회기록관리시스템 중장기 발전방향(ISP) 수립 최종보고서. 국회도서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6). 2026 주요업무 추진 계획.
- 박찬 (2025. 11. 16). MS, 직원 평가에 AI 활용 평가 도입... "AI 사용은 선택 사항 아니야". AI TIMES, 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42> (2026. 5. 20.)
- 성면섭, 김장환 (2022).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가이드 구축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14(3).
- 신무경 (2016. 3. 12). 이세돌 9단 "무력한 모습 보여 좌승...알파고의 능력 오판".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lt/article/all/20160312/76958617/1> (2026. 5. 20.)
- 여상아 (2022).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영국 의회기록보존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4(3).
- 오규진 (2022. 12. 1). 챗GPT 파급효과 어디까지?...정부, AI 전략 '고심'.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7133500017> (2026. 5. 20.)
- 오대석 (2017. 10. 19). 스스로 바둑 깨우친 '알파고 제로'...AI '새 이정표'. 전자신문, 출처: <https://www.etnews.com/20171019000101> (2026. 5. 20.)
- 우원식 (2026. 4. 30). 국회의장 국회기록원 개원식 축사. 국회기록원.
- 이승일 (2008).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기록학연구, 18.
- 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좌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최종보고서.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 최용석 (2024. 6. 18). AI와 로봇의 혁신 기술 ... '제13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코엑스서 개최.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lt/article/all/20240618/125490043/1> (2026. 5. 20.)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국회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방안 연구. 대한민국 국회.
- 한상용 (2026. 3. 11). 이세돌 "알파고, AI 시대 미리 보여준 사건".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1129000017> (2026. 5. 20.)
- 함정선 (2023. 3. 11). 챗GPT는 왜 그럴까한 거짓말을 할까[공공한시]. 이데일리,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9846635542336> (2026. 5. 20.)
- Archives New Zealand.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and local authority records [Document identifier: 23/G25].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https://www.archives.govt.nz/manage-information/how-to-manage-your-information/implementation/artificial-intelligence-and-public-records>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26, February). 2025 NARA AI Use Case Inventory. NARA. <https://www.archives.gov/ai>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25, January). Information management for records cre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https://www.naa.gov.au>
- The National Archives. (2021, October). Using AI for Digital Records Selection in Government: Guidance for records managers based on an evaluation of current marketplace solutions. The National Archives.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부. 국회기록원 설립 경과 및 의의

국회기록원 설립의 경험적 고찰

이재운(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

의정활동기록은 국회의 입법·심의·감시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정책 판단의 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와 조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한 공적 권한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록이 입법 결과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평가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필수적 근거로 기능하기 때문에 높은 공적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의정활동기록이 오랫동안 제도적 기록관리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본 발제는 올해 발행된 학술논문 「의정활동기록화 인식의 확산과 국회기록원 설립의 경험적 고찰」의 주요 논지를 요약·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법이 시행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정당 기록물과 헌정 자료 등 의정활동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내부자로서 국회기록원 설립과정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먼저 의정활동기록 개념과 범위 문제, 의정활동기록화 인식의 확산, 국회조직 내부의 인식 전환, 기존 국회기록관리 체계의 법적·제도적 한계 등 기관의 설립 과정에 배경으로 작용한 요인들을 밝힌다. 둘째 실제 기존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회기록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제도로 실현되었는지, 어떻게 12.3 비상계엄과 같은 우연적 계기가 설립 논의에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단계마다 어떤 쟁점이 주로 논의되었는지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국회기록원 설립이 단순한 기록관리 조직 개편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책임성과 기록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었음을 드러낸다.

1. 국회기록원 설립의 주요 배경

(1) 의정활동기록의 개념과 범위 문제

기록학에서 의정활동기록 개념과 범주에 관한 논의는 의회 기록으로부터 출발한다. 의회 기록의 주요 출처는 회의체와 의장단을 비롯한 국회의원(이원영, 2004)이다.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입법자(lawmaker)로서 국회의원은 회의체를 이루어 입법 과정을 이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입법 체계란 전문위원이나 국회 내 소속기관 등 입법·행정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이라는 입법자(lawmaker)가 행정부, 정당, 언론이나 이해단체, 국민과 같은 외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 기록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고스란히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이어야 할 것이다.

2000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가 설립되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도입되었지만, ‘국회기록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제화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단지 소속기관을 명명하면서 이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 정의하고, 관리대상을 ‘소속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결재·접수한 기록물 및 국회의

장·부의장·위원장·소속기관장의 주요 업무 기록물’에 한정했다(제7조). 이에 따르면 ‘국회기록물’에서 앞서 논의한 의회 기록의 주요 출처인 상임위원회¹⁾와 같은 회의체와 국회의원이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와 같은 ‘국회기록물’은 실질적인 의정활동기록이 아닌 ‘의정지원활동기록’에 해당한다는 지적(이경선, 2017)이나 ‘국회기록물’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국회기록물에 대한 오인된 인식이 작용했다는 지적(서복경, 2023)이 잇따랐다. 즉, 국회기록물을 포착하고 이를 평가하거나 관리할 때 해당 기록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평가지표가 되는 만큼, 이 ‘정체화’ 단계가 생략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기록관리에 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들²⁾이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 및 내부적인 필요의 결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2016년 국회도서관법을 개정³⁾하고 이듬해 2017년 기존 ‘국회기록물’과 별개로 ‘의정활동 기록물’에 관한 정책을 수립했다. 그 내용은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규정된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을 제외한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민간 기록물을 ‘의정활동 기록물’로 통칭하고 이를 관리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문제는 제도상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과 별개로 그 정책이 수립되면서 의정활동 기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⁴⁾. 국회기록물을 정체화하는 과정에는 국회기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들기 마련이다. 김남희(2016)에 따르면 헌정자료란 의회정치에 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임시의정원을 비롯해 의회사의 주요 사건 관련 기록물이나 의회정치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 기록물을 포함한다. 헌정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주에는 우선적으로 국회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또 역사를 전승하는 목적이 자리매김해 있으며 타 기관이나 유족, 전문수집가, 기업⁵⁾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는 국회의원실을 각 소속기관 사무 담당관, 위원회와 같이 하나의 처리과로 간주하며, 소속기관에서 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국회기록물이라 정의하는,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기록물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관점(2020)과 사뭇 다르다. 다만 의정활동기록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기존의 결과 중심의 기록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기획단계를 드러내는 기록으로, 원내에 국한된 기록에서 원외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기록(국회도서관, 2024)으로 확장되고 논의되고 있었다.

(2) 의정활동기록화 인식의 확산

기록관리제도 및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곧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조건으

1) 물론 처리과에 대한 규정에서 각 사무 담당관과 함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행정) 및 입법조사관 등을 파견하여 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회의록을 생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한은정, 임진희(2009), 최혜영, 이승일(2019), 장연희, 윤은하(2024) 등

3) 직무 조항에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을 신설함.

4) 가령 안경혜는 의정활동기록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대표하고 입법과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모든 기록(2018, 18)이라 보았고, 최혜영과 이승일 역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국회의원, 위원회, 정당, 소속기관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으로 통칭(2019)한 바 있다.

5) 2025년 2월 27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삼일절을 앞두고 해공 신익희 선생의 격언이 적힌 친필 휘호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일보, ‘스타벅스, 삼일절 앞두고 해공 신익희 선생 친필휘호 전달’, 2025.02.27

로 인식되면서 국회를 대상으로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기록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201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매년 의정활동기록은 속절없이 대량으로 파기되거나 뿔뿔히 흩어져 소실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학계는 국회의원실에서 생산한 문서 관리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기록관리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기록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⁶⁾. 특히 국정감사나 주요 사회적 쟁점 법안, 예산 심의와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떤 판단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서복경(2023)은 의원실에서 생산된 기록물, 국회의원의 개인 정치활동, 지역구 활동은 물론 정당 기록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국회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학계에서도 연구를 위한 자료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의회정치, 입법, 정책 등 다양한 학제의 연구자들은 정치적 행위자들과 그 상호작용 등 정치 동학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제도나 갈등 패턴, 입법 과정과 정책, 예산 등 광범위하면서 미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풍부한 의정활동기록을 필요로 한다. 자료의 부족은 곧 경험적·실증적 제도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3) 국회조직 내부의 인식 전환

초기에는 국회조직 내부에서 의정활동기록을 정치적 자율성의 영역이나 개인의 자산으로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입수·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이 우세했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특히 근무 경력이 오래된 보좌진일수록 그런 경향이 높았다(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의 비공식 메모나 정치적 타협과정이 훗날 앞뒤 맥락이 제거된 채 명예 훼손, 사실 왜곡, 정치적 보복 등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외 인력의 부족, 자유로운 의정활동의 위축, 기록관리 인식 부족 등의 요인 역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들이 의정활동기록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의정활동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관리와 공개에는 소극적 태도를 갖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정활동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과 같이, 결과만 있고 과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만일 어떤 사고나 정치적 논란이 생겼을 때 정치적 책임성을 사후 검증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록이 부재해 정치적인 소모전이나 음모론, 역측만 난무하게 될 위험성도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렇듯 의정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준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과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한편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헌정기념관이 수행하던 헌정 자료 수집·관리 기능을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으로 이관·통합하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⁷⁾.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 제안’, 2020. 4. 9. <https://www.archivists.or.kr/1580>

7) 2010년 10월 1일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관장 회의에서 헌정기념관의 국회도서관 이관을 제안했다. 같은 해 국회도서관은 의정활동기록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해당 보고서(국회도서관, 2010)에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을 통합한 국회 기록원 모델이 제안되었다. 즉 소속기관 기록물은 물론 회의록, 정책보고서, 국회의원 기록을 포괄하는 의정활동기록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국회 내부에서 토론회 방식을 통해 의정활동기록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적 논의들이 전개되었다8).

(4) 기존 국회기록관리체계의 법적·제도적 한계

앞서 기존 기록관리체계의 한계를 다룬 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국회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며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조직이었고, 국회도서관으로부터 헌법기관기록물관리 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책무를 일임받고 있었다. 한편 각 국회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는 조항이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 2011년 전부 개정 시 삭제되어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에 이어 기록관 업무까지 떠맡았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업무 특성상 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뿐 아니라 의장단, 국회의원, 정당 등 주요 주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선 이러한 전방위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이렇듯 그 책무에 비해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존립 근거가 빈약했고 위와 같은 법적·제도적 요건들은 국회기록보존소가 가진 불안정한 조직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김유승, 김장환, 2013, 82).

이러한 위상은 예산·인력 부족과 함께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가령 의정활동기록 수집 및 활용 업무에 각각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 배정되었다. 헌정 자료와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이라는 기능이 국회박물관과 국회기록보존소에 중복된 채로 정체되었고 전자 형태의 국회 기록정보나 데이터세트에 관한 정책이나 규정도 미비했다.

이에 따라 각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정보가 각 소속기관의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의정활동기록이자 맥락으로서) 관리할 만한 인프라가 부재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플랫폼을 통한 국회 업무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구 활동, 세미나나 토론회, 공개 강연에서 한 발언 등이 SNS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집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약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한계와 제약들은 실제 국회기록보존소가 의회 기능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수행해왔음에도, 그 결실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2. 국회기록원 설립 추진 과정과 쟁점

(1) 문제 제기와 공론화

앞서 논의한 것처럼 국회기록원 설립 논의는 제도적 공백 가운데 의정활동기록이 지속적으로 폐기·소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국회기록물’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의 위상과 인력·규모의 한계로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와 함께 다수의 의정활동기록이 폐기·소실되는 구조적 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시민단체나 학계 등 시민사회는 이러한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통해 국회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

해 국가기록원에 버금가는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고 합당한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도 업무보고에서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헌정 자료 수집·관리업무를 국회도서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보고받기도 했다.

8)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우리에게 기억기관은 무엇인가?’ 토론회(국회의원 강운식·김경수·이재정 및 국회도서관 공동주최, 2017.12.22.),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국회의원 박주민 주최, 2023.12.15.) 등

성을 실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누적되어 온 논의를 바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사상 최초로 기록팀을 구성하고 기록비서관을 고용해 ‘국회기록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장은 2024년 출입 기자 간담회, 개원사, 국회사무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회의 위상은 물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재차 언급했다. 의정활동 기록은 “국회가 생산하는 당대의 역사이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는 국회의장의 인식 아래 국회기록원 설립은 국회의장의 역점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국회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방안 연구」연구용역을 발주했다(기간: 2024.10-2024.12, 수행기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해당 연구는 의정활동기록 개념 및 관리 범위,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 조직·인력 및 운영 모델 등이 담겨있으며, 실제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방안 및 조직 개편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4일 대한민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⁹⁾, 그리고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한과 그 위상을 국민이 새로 인식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러한 역사적 위기가 국회기록원 설립 과정에도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다수의 기록물¹⁰⁾을 주요한 의정사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기록보존소가 관리하는 기록의 범주와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현장 자료의 범주 사이엔 모호함이 있었고 이를 정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곧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위상을 개편하고 국회 차원의 전담 기록관리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또 한 번의 전환점은 2025년 7월 11일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였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위 토론회는 국회기록물관리를 위한 독립 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등 국회기록원 설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학계의 논의를 집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제도 설계 및 조직 구상

국회사무처의 관련 계획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은 기존 국회기록보존소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국회 기록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독립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계되었다. 핵심 방향은 ▲국회의장 소속 하의 독립성 확보 ▲의정활동기록의 적극적 수집 및 이를 포함한 국회 기록 전반의 통합 관리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 확충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강화였다.¹¹⁾

조직 구상 과정에서 특히 논의된 쟁점은 국회의원실 기록을 제도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었다. 즉 의원실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관리·활용할 실효적인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원의 위상을 어떻게 격상해야 하는지, 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위상은 물론, 지휘·감독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가 주요 논의 주제였다. 기록관

9)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서 <넘고 넘어>에서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이나 절차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시 의사국장이 제시한 1964년 6·3사태 당시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형식으로 처리했던 전례를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10) 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며 남긴 흔적, 가령 당시 군이 소재했던 탄창, 본청의 파손된 유리창, 해제 의결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영상·통신 기록이 축적되었다.

11) 국회사무처, 국회기록원 관련 추진계획(안) 비공개 내부 보고문건, 2025.2.

리기관이 행정적·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충분히 독립성을 갖지 못할 경우 필요할 때 기록을 통제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국회의원 300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회 소속기관의 지위(장·차관급)를 고려해 국회기록원은 차관급 이상의 기관 위상을 갖추고 기록관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기록원은 단순히 양적인 축적을 지향하고 국회의원을 ‘감시·통제하는 기관’이 아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판단을 가능케 하는 민주적 아카이브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3) 법안 도입

기관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초안이 도출되었다. 「국회기록원법」이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성안된 이후 국회의장 제의(의견제시) 방식으로 입법 절차에 편입되었다. 이후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안(의안번호: 2213239)으로 2025년 9월 24일 접수되었다. 이어지는 핵심 과제는 법률안 심사 절차를 잘 이행하는 것이었다. 국회기록원법은 유관 법률에 대한 개정안¹³⁾과 함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정부 심의, 공포 및 시행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쳤다¹⁴⁾. 각 단계에서 의정활동기록의 유실 위험과 체계적·전문적 관리의 필요성, 기록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완성 등의 명분과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이루어졌다.

(4) 주요 쟁점과 조정

기존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산하 조직으로 편제(2009.04.27.)되고 반복적인 조직 이관을 거치며 제대로 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다(서연주, 양승민, 2004; 김유승, 2011;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이에 따라 국회기록원은 국회의장 소속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적용되었다(제2조). 행정부 소속 국가기록원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입법부 기록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기록원의 기록관리 범위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과거 의원실에서 생산된 기록이 공적 권한을 행사한 과정의 산물임에도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의정활동기록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적 권한을 행사한 과정이 담긴 기록으로 사후 검증과 정치적 책임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이며 공적 가치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은 물론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 기록물, 헌정 자료의 수집과 관리도 수행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적용되었다(제3조). 결론적으로 이 과정은 기록관리 기술(technology)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율성과 민주적 책임성 사이의 긴장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기록의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과정이었

12) 최근 120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뒤늦게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급기관을 상대로 한 문서보존 요청 및 실태점검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13) 국회기록원법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함께 발의되었다. 또 국회 사무처 직제 등도 개편되고 국회기록원 직제(국회규칙 제245호) 역시 제정되었다(2026.01.12. 시행).

14) 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뒤 위원회안이 가결되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되었고(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이 가결되어 본회의로 회부되었다. 2025년 10월 26일 제24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11월 11일 국회기록원법이 공포되어 다음해 1월 12일 시행되었다.

다. 의정활동기록이 수집·관리·활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개정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3. 국회기록원의 제도적 역할과 운영 방향

(1) 의미 구성의 업무 체계

국회기록원의 업무는 전통적인 기록관리기관의 기능인 수집·정리·보존·공개를 포함하지만, 국립기록원 설립 논의에서 강조된 바, 의정활동기록은 행정절차의 부산물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권력 행사의 과정을 담는 기록인 만큼 정치영역 기록이 지니는 의미와 맥락을 제도적으로 유지·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회기록원의 업무를 ‘보존의 완결’에서 찾기보다 ‘설명의 가능 조건’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판단 맥락, 정치적 조정과정, 공식·비공식 논의의 흔적을 구조화·연결·제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과정 기록을 우선하는 수집·평가 기준, (2) 의정활동의 전개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맥락 기술(description) 전략, (3) 생산 단계에서 최소한의 맥락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의정활동기록 관리업무와 정치적 중립성

국회기록원의 업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논쟁적인 영역은 의정활동기록의 관리다. 국회의원의 자율적 정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통적인 기록관리기관들이 ‘가치중립성’을 채택해오던 방식과 같이 만일 기록의 중립성을 ‘비개입’ 또는 ‘물가치성’으로 환원한다면 정치영역 기록은 반복적으로 관리 범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중립성은 (1) 수집의 대표성, (2) 기술(description)·평가 판단의 투명성, (3) 접근 결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구현되는 ‘절차적 중립성’에 가깝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기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특정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각자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의 조건(맥락·연결·근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3) 기록의 공개와 활용

또 다른 핵심 업무는 기록의 공개와 활용이다. 기록의 접근성과 공개는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단계로 매우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기록원은 정치영역과 국회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용자 분석을 통해 공개·활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기록을 이관·기증·이용하는 국회의원·보좌진·국회 사무 담당관 등 내부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이해관계자·학계 등 외부 이용자 집단과의 관계를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국회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는 결과 중심 열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및 정책 결정 과정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방식일 필요가 있다. 특정 법안이나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거나 의원별·시기별 의정활동기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예시일 수 있다. 다만 공개·활용에 앞서 국회의원·정당의 적극적인 의사활동을 저해하거나 정치적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당한 보호와 공개 제한 원칙,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민주적 아카이브

국회기록원은 민주적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기록 보존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억을 조직하는 공적인 장인 것이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매개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기록을 수집·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장 기록이 사회와 시민의 삶과 어떻게 교차하고 연결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논의를 종합하면 향후 국회기록원의 업무 방향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이다. 정치영역 기록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과 접근성의 확대이다. 제한적 공개 중심의 운영을 탈피해 원칙적인 공개 및 적극적 활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 참여와 교육 기능의 확장이다. 국회기록원은 시민이 기록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요소들을 학습·참여·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5. 향후 과제: 디지털 전환과 기록 패러다임 전환

정치영역에서는 이메일, 메신저, SNS, 온라인 회의시스템, 디지털 정책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이 의정활동의 핵심적 매개로 기능한다. 이러한 환경은 기록이 단지 사후적으로 보존되는 대상이라기보다 현재의 정치 과정 안에서 관리되고 또 쓰일 수 있는 동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요구한다¹⁵⁾. 다시 말해 디지털 기록을 단지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기관이 아니라, 분산된 디지털 기록을 구조화하고 맥락화함으로써 정치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흐름을 설명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기록원은 기록의 매체 변화에 그치지 않고, 수집(획득)-보존(진본)-공개(보호/접근)-의미(연결/설명)라는 기록관리 업무 전 주기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특히 정치영역의 디지털 기록은 실시간으로 생성·유통되는 과정 자체가 의정활동의 핵심 맥락이므로 이러한 '정치 과정' 속에서 기록의 의미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 사회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치영역 의정활동은 이미 플랫폼화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기록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원 운영 방향 역시 AI·빅데이터·플랫폼 환경을 전제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록의 축적량을 늘리기보다 기록을 기계가독형(machine-readable) 데이터로 전환하고 방대한 의정활동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맥락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 발의와 수정, 정책 논의, 여론과 플랫폼¹⁶⁾, 플랫폼에 모이는 담론 같은 정보 환경이 기록과 상호 연계될 때 비로소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논의는 데이터 간 연계, 맥락 정보(metadata)의 확장, 전거(authority) 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복합적 흐름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특히 AI 환경에서 기록을 학습 데이터로 전환·입력하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기록은 국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국회기록원은 AI가 어떤 기록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나 출처가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관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의미한다.

15) 디지털 자원을 다룰 때는 흔히 FAIR원칙(탐색 가능성·접근성·상호운용성·재사용 가능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된다(김학래, 2023)

16)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전자청원,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등의 플랫폼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문헌

- 국회도서관 (2010). 의정활동 관련 기록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 김남희 (2016). 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95-119.
- 김유승, 김장환 (2013).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81-106.
- 서복경 (2023. 12. 15.). 토론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연구.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서울.
- 서연주, 양승민 (2005).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201-211.)
- 안경혜 (2018). 국회 의정활동기록 관리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이경선 (2017).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 입법학연구, 14(1), 211-233.
- 이원영 (2004).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 110-142.
- 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좌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 최혜영, 이승일 (2019).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97-121.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회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2024.12.31.

국회기록관리 정책 이슈와 향후 과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중심으로

목차

I | 추진배경 및 방향

II | 분야별 개정 추진과제

1 |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지식정보자원화 · 위원회 강화 · 국회기록물관리 표준 제·개정 근거 등

2 |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이관시기 · 폐기심의 · 의정활동기록물 관리 등

3 |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전자기록관리 · 지능형 아카이브 등

4 | 기타 사항

용어 정의 수정·신설 · 오기 및 표기법 정비

III | 향후 추진계획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배경 및 방향

① 추진배경

- 2011년 전부개정 이후 **입법 미비사항** 및 문제점 제도 개선 필요
- 「국회기록원법」 제정·시행('26.1.12.)에 따른 **고유기능 수행 근거** 시급 반영

② 추진실적 (2025년)

- 개정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1~3월)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 T/F' 운영 (4~6월)
- 개정안 마련 및 유관부서 협의 (7~9월)
- 하위규정 검토 (9~12월)

③ 개정 추진방향

- 국회기록원의 신규·확대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공공기록물법 **개정사항** 및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 혁신 자문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추진**



분야별 개정 추진과제



분야별 개정 추진과제 — 개요

| ①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 지식정보자원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근거 마련
- 전문요원 자격 기준 변경
- 국회기록물관리 표준 제·개정 근거 규정 신설
- 현황평가·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

| ② 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 비공개회의록 이관시기 및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매체 명시
- 준영구 이상 기록물 폐기 시 심의회·위원회 심의 강화
- 기록물 폐기 금지 및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중요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의무 신설
- 의정활동기록물의 관리 관련 장(章) 신설

| ③ 디지털 트렌드 반영

- 간행물 이관 방식 변경(책자→전자)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의무화
-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전자적 복구 체계 수립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구축·개선 시 사전협의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및 수집·활용 근거 마련
- 지능형 아카이브 운영 관련 장(章) 신설

| ④ 기타 사항

-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수정 및 신설
- 오기 및 표기법 수정



1.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① 지식정보자원 활용 의정지원 근거 마련

- 국회기록물을 AI·데이터 기반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원칙 신설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③ 국회기록원장은 국회기록물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②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강화

- 위원: 11→13명
- 소속 :국회도서관→국회기록원
- 개최: 연1회→반기별
- 심의안건 추가(폐기·표준·평가결과 등),
- 해촉 근거 마련

제5조(국회기록관리위원회) ① 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5. 제32조의2에 따른 비공개회의록등의 공표

6.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제39조제3항에 따른 기록관리 현황 평가·점검 결과

8. 제43조에 따른 의정활동기록물의 평가·폐기

⑥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고유 업무 근거

- 고유 사무 근거 신설
 - 정리·기술, 편찬, 콘텐츠 구축, 전시, 대여, 공개기록물 열람 제공 등

제35조(보존기록물의 활용) ① 국회기록원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존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의 정리(整理)·기술(記述)을 통한 열람지원
2. 기록물을 활용한 편찬 및 콘텐츠 구축
3.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전시

② 국회기록원장은 전시, 업무상 활용 등의 목적으로 보존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이 열람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④ 전문요원자격기준 변경

- 행정부·헌법기관과 동일하게 통일
- 기록관리학 학사+교육과정+시험 합격
경로 신설
3년 경력 경로 삭제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41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기록물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삭 제>



1.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⑤ 기록물관리 표준 제·개정 근거 신설

- 국회기록원장이 표준화 계획 수립
- 표준 제·개정·폐지 시 위원회 심의 및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제38조(국회기록물관리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국회기록원장은 「국회기록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회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회 아카이브 위상 정립

⑥ 기록관리 현황평가·점검 강화

- 매년 현황평가 계획 수립·시행
- 소속기관 제출 의무화
- 위원회 심의 후 공표
- 의원실 현황 점검 및 지원 근거 신설

제39조(기록관리 현황평가) ① 국회기록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현황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기록관리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점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0조(기록관리 현황 점검 및 조치) ① 국회기록원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① 비공개회의록 이관시기 /비공개상한기간

-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 이관시기 최대 50년까지 연장국가안보 관련 회의록: 50년 범위 내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 가능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국회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른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은 국회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생산·관리하는 의안문서 및 국회의회의록은 국회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이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②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은 50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회법」 제54조의2 단서
2.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중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② 준영구 이상 보존매체 수록 방식 구체화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을 명시적으로 규정
- 원본 폐기 후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 적용

제16조(보존방법)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1. 전자매체(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되거나 해당 시스템 또는 장치에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이크로필름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③ 준영구 이상 기록물 폐기 심의 강화

- 영구보존 필요성 상실 또는 보존매체 대체 시
 - 평가심의회 및 위원회 심의 각각 의무화

제2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⑤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제36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21조에 따른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④ 기록물 폐기금지 /시정조치 근거

- 국가기록원 요청 시 폐기 금지 통보 및 심의 제외
- 폐기 금지 해제·기간 연장, 관리실태 확인 및 시정요구

제21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해지 등) ① 국회기록원장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폐기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평가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기록원장이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폐기의 금지, 그 해제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대상·사유·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⑤ 중요 기록물 보존처리·복원 의무 신설

- 상태검사 → 보존처리 → 복원의 체계적 관리 의무화
- 과학적 보존·복원 기술 개발 및 확산 노력 명시

제27조의2(기록물의 보존·복원) ① 국회기록원장은 소관 기록물이 멸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검사하고, 상태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보존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복원하여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관련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⑥ 의정활동기록물 관리 관련 장(章) 신설

제8장 의정활동기록물의 관리

-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정활동기록물) 수집범위 명시
- 폐기 금지 해제·기간 연장, 관리실태 확인 및 시정요구
-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접근권한, 보존기간 등 책정·부여
-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접근권한, 보존기간 등 책정·부여
- 기록물 수집 및 업무 지원을 위한 기록조사위원, 자문위원 위촉

제41조(의정활동기록물의 수집 등) ① 국회기록원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이하 "의정활동기록물"이라 한다)을 수집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3. 대한민국 정당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4.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등 근현대 입법기구와 관련된 기록물 5. 제2조제11호에 따른 헌정자료 6. 그 밖에 국회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기록물

② 국회기록원장은 의정활동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하여 국회의장단 등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파견, 기록물 목록작성 및 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기록원 내규로 정한다.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⑥ 의정활동기록물 관리 관련 장(章) 신설

-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정활동기록물) 수집범위 명시
- 폐기 금지 해제·기간 연장, 관리실태 확인 및 시정요구
-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접근권한, 보존기간 등 책정·부여
-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접근권한, 보존기간 등 책정·부여
- 기록물 수집 및 업무 지원을 위한 기록조사위원, 자문위원 위촉

제8장 의정활동기록물의 관리

제42조(의정활동기록물의 정리) ① 국회기록원장은 수집한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책정, 공개 여부·접근권한 구분,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와의 협의를 거쳐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접근권한,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정활동기록물의 평가) 국회기록원장은 수집한 의정활동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44조(의정활동기록물의 보존·활용) ① 국회기록원장은 의정활동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제41조에 따라 수집한 의정활동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

⑥ 의정활동기록물 관리 관련 장(章) 신설

-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정활동기록물) 수집범위 명시
- 폐기 금지 해제·기간 연장, 관리실태 확인
및 시정요구
-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접근권한, 보존기간 등 책정·부여
-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접근권한, 보존기간 등 책정·부여
- 기록물 수집 및 업무 지원을 위한
기록조사위원, 자문위원 위촉

제8장 의정활동기록물의 관리

제45조(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① 국회기록원장은 제41조에 따라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거나 국회기록관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 조사·자문·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① 간행물 전자 이관

- 발간등록번호 부여 의무화 실물 책자
→ 전자적 형태로 이관 방식 변경

제10조2(간행물의 이관·관리) ① 소속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의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전자적 형태의 간행물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간행물 2부를 말한다)을 관할 기록관과 국회기록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②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의무화

- 상태검사 → 보존처리 → 복원의 체계적 관리 의무화
- 과학적 보존·복원 기술 개발 및 확산 노력 명시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기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법령, 시스템, 데이터, 업무 및 기록관리 관련 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대상 선정, 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회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



3.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③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복구 체계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관리 의무화
- 전자적 복구 체계 수립·시행 의무화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② 국회기록원장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등의 검증을 실시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의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④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사전협의

- 상태검사 → 보존처리 → 복원의 체계적 관리 의무화
- 과학적 보존·복원 기술 개발 및 확산 노력 명시

제12조의2(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개선 시 사전협의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록물관리 기능을 개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기록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능개선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물관리 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기록원장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록물관리 기능 등을 점검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⑤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 의무화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 기술정보 관리
- 장기보존·활용을 위한 수집·활용 대책 마련

제12조의4(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디지털 기록관리 트렌드 반영

제9장 지능형 아카이브 운영 및 활용

⑥ 지능형 아카이브 장(章) 신설

- 운영계획 수립, 기술 연구·개발 의무화
- AI 윤리원칙 반영 윤리기준 제정·공표

제46조(지능형 아카이브 운영) ① 국회기록원장제3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아카이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회기록원장은 지능형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능형 아카이브 활용) ① 국회기록원장은 「국회기록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형 아카이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행된 기록물관리의 처리 결과는 아카이브 관리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국회기록원장은 지능형 아카이브를 활용함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관리자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8조(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표) 국회기록원장은 국회기록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능형 아카이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국회기록원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 용어 정의 수정 및 신설 (제2조)

수정 | 소속기관에 '국회기록원' 추가

수정 | 처리과 범위를 '과·담당관·팀 및 위원회'로 명확히 규정

수정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정의 수정

신설 | 웹기록물 정의 규정 신설

신설 | 장기보존패키지 정의 규정 신설

신설 | 지능형 아카이브 정의 규정 신설

(2) | 오기 및 표기법 수정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표기법	○인 임명 또는 위촉 범위 안에서	○명 임명하거나 위촉 범위에서
띄어쓰기	외부전문가 국회 규정 지정여부	외부 전문가 국회규정 지정 여부
의미 명확화	평가일부터 10년마다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평가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10년마다 재분류된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개정안
초안



자문/
의견수렴



위원회
상정



하위규정
정비

~'26. 2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안
초안 완성

3~5월

국회기록원 혁신 자문위원회 자문,
원내 의견수렴

6월

국회운영위원회 개정안 상정 및
심의 대응

7월~

「국회기록물관리규정」·
「국회기록물관리내규」 정비

감사합니다

5개 키워드

-국회기록원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안-

한능우



01

AI의 수준

권영길 전기
의정 시각화/채팅
셸렌버그 페르소나
AI의 수준 평가

02

5가지 키워드

기록의 데이터화
상향식 계층 기술 자동화
의정기록 수집 지능화
개방형 기록 지식 서비스
인간-AI 협업 아카이브

03

평가와 제언

평가
제언

01

시의 수준

국회기록원 시연 사례 소개



안드레이 카파시 (Andrej Karpathy)

2025년 12월, 그날 이후.....

한국 진보정당 정치 1세대 개척자의 기록

권영길



<입력 자료>

- 2024년 국회기록보존소 구술기록 (6회, 251쪽, 17시간 이상)
- 언론기사 12,168건,
- 페이스북 게시물 501건,
- 블로그·유튜브·트위터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구성

<팩트체크 50건 전체 결과표>

27건

확인된 사항 (54%)

10건

불일치 — 정정 (20%)

13건

검증불가 (26%)

소개 **전기 챗봇** 연표 발언록 선거 인물 **관계도** 페르소나 전기 읽기

한국 진보정당 정치 1세대 개척자의 기록

권영길

빨치산의 아들, 기자,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노동자의 대통령 후보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3회 대통령 후보	957,148 2002년 대선 득표	2선 국회의원 (창원을)	84세 1941년 출생
---------------------	-------------------------------	-------------------------	------------------------

국회기록원

국회기록물 기록 속 의정사 기록콘텐츠 이용안내 기관 소개

전체 62 건, 현재 페이지 1/7

등록일자 최신순 10개씩 보기 적용

김진표 황우여 이윤성 권영길 박병석(추가)

한명숙 이한구 유인태 박지원 서철원

1 2 3 4 5 6 7

https://www.nara.go.kr/interview/interviewList.do?curr_menu_cd=0112010000

사용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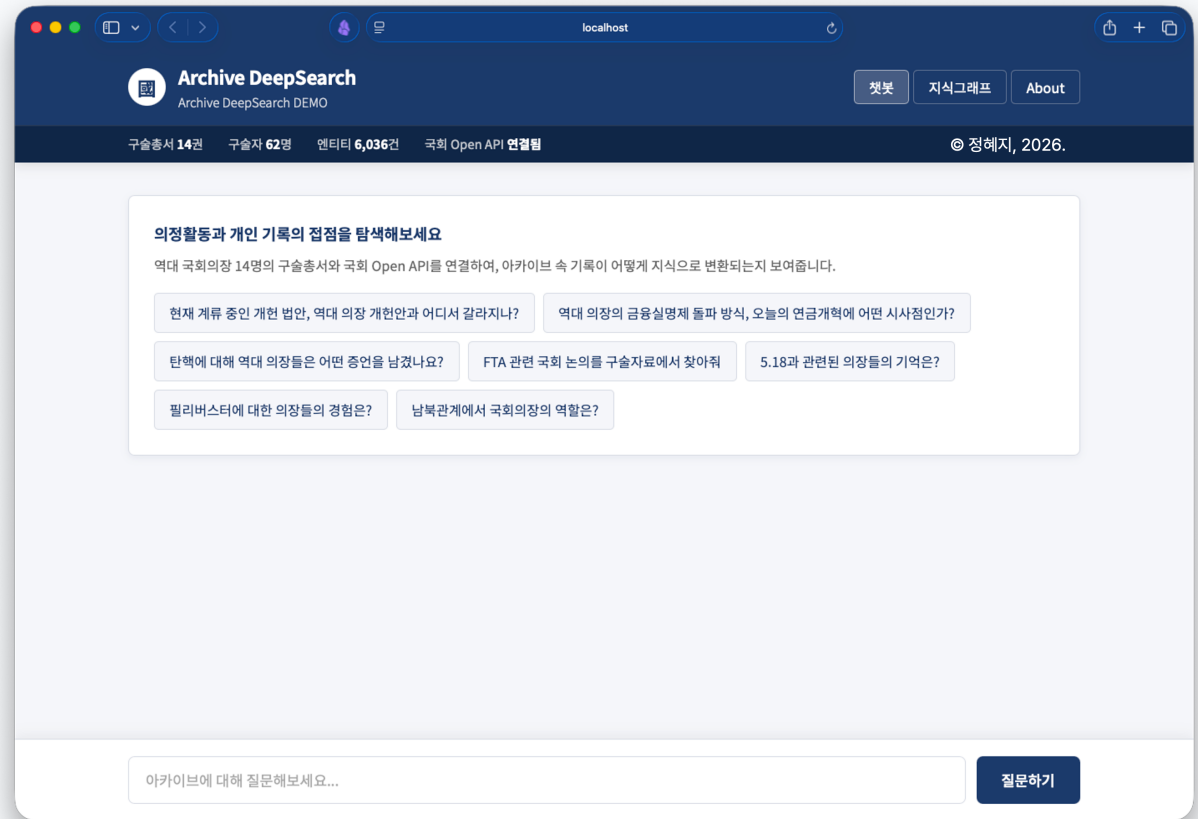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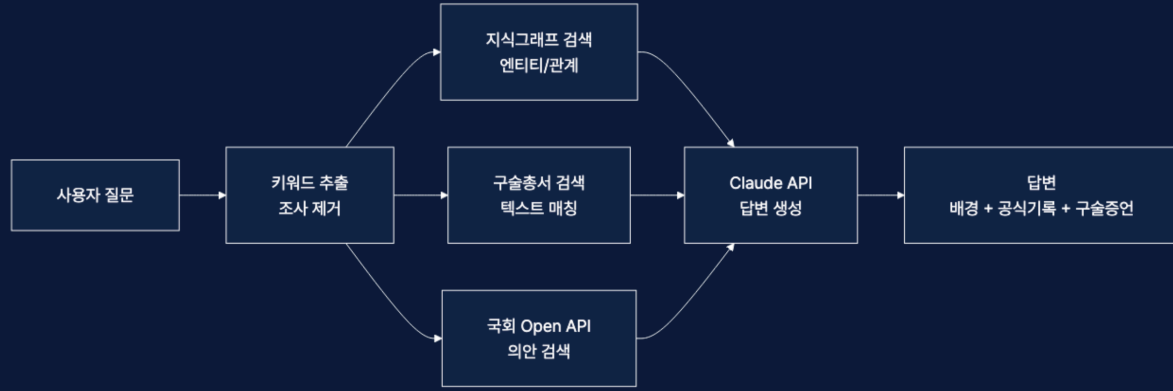
모든 데이터는 국회기록원과 국회 공개 서비스에서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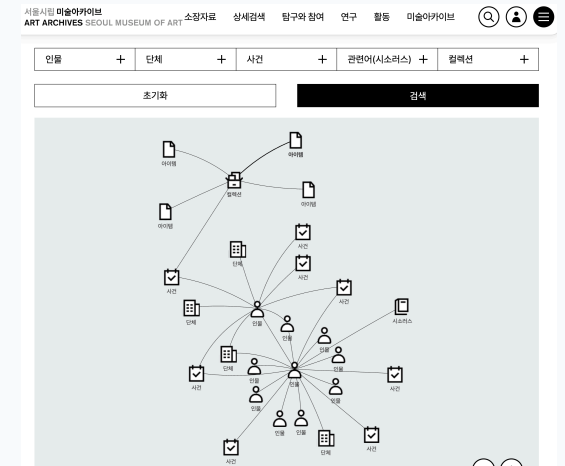
데이터	출처	분량
구술자 메타데이터	국회기록원 (archives.nanet.go.kr)	62명, 540KB
구술총서 전문	국회전자도서관 (dl.nanet.go.kr)	14권, 212만 자
약력, 해제문, 참고자료	국회기록원	62명분
의안, 의원, 회의록	국회 Open API (open.assembly.go.kr)	276개 API, 실시간

빌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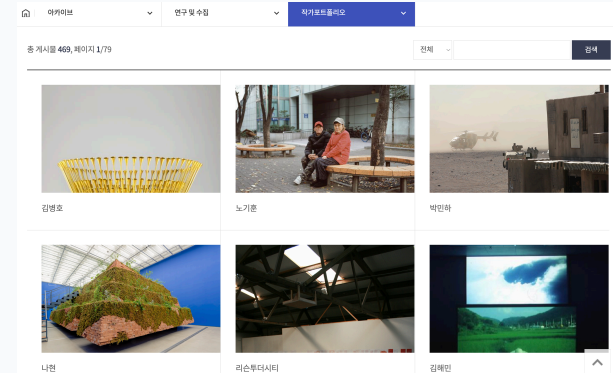


작동 원리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collection/look.do?menuid=19>



<https://www.arko.or.kr/artcenter/board/list/512>

내친 김에....

TRS *Theodore Roosevelt Schellenberg*
ARCHIVIST · THEORIST · NARA · 1903-1970

미국 기록학 이론의 아버지 | 1차·2차 가치론 | 현대 평가 이론 창시

키워드 매칭 봇 · 외부 API 없음

페르소나 소개 | FAQ | 대화하기

"기록은 그것을 만든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기다리는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 T. R. Schellenberg의 사상적 핵심

생애 & 경력

- 1903
캔자스 주 Harvey County 메노나이트 이민 가정에서 출생. 러시아에서 이주한 경건한 신앙 공동체 배경.
- 1928-1934
캔자스대학(B.A., M.A.) → 펜실베이니아대학 역사학 박사. 역사학자로서의 훈련이 기록 가치 판단의 기반.
- 1935
NARA 부심사관으로 입사. 1,000만 입방피트의 연방 기록 더미와 맞닥뜨림.
- 1939
농무부기록과장. 유럽 평가 방식의 미국 적용 한계를 논문으로 발표.
- 1945-1948
물가행정국 기록관으로 이직. 대규모 행정 기록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 직접 경험.

T. R. Schellenberg (테오도르 R. 셸렌버그)의 페르소나를 만들려고 해. 먼저 이 사람의 저작과 관련 평가 평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페르소나의 초안을 만들어봐.

이 페르소나와 대화하는 채팅창을 html로 만들어줘. 채팅창에는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 예시 질문과 답변, 채팅 탭이 들어가면 좋겠어.

키워드 매칭 봇 (외부 LLM 없이 돌아가는 채팅봇) 방식으로 만들어줘. FAQ가 35개인데, 최대한 만들면 몇개까지 가능해? FAQ를 최대한 만들어줘.

TRS *Theodore Roosevelt Schellenberg*
ARCHIVIST · THEORIST · NARA · 1903-1970

미국 기록학 이론의 아버지 | 1차·2차 가치론 | 현대 평가 이론 창시

키워드 매칭 봇 · 외부 API 없음

● 확인 중... ⊗ API 키 설정

페르소나 소개 | FAQ | 대화하기

"기록은 그것을 만든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기다리는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 T. R. Schellenberg의 사상적 핵심

생애 & 경력

- 1903
캔자스 주 Harvey County 메노나이트 이민 가정에서 출생. 러시아에서 이주한 경건한 신앙 공동체 배경.
- 1928-1934
캔자스대학(B.A., M.A.) → 펜실베이니아대학 역사학 박사. 역사학자로서의 훈련이 기록 가치 판단의 기반.
- 1935
NARA 부심사관으로 입사. 1,000만 입방피트의 연방 기록 더미와 맞닥뜨림.
- 1939
노무보기록기관 운영 평가 방식이 미국 것을 형제를 본모습으로 받...

FAQ 매칭 우선 → 실패 시 Claude API 직접 호출 방식으로 교체하고, API 키 입력키를 추가해줘.

TRS

vs

HJ

Schellenberg vs Jenkinson

ARCHIVAL THEORY DEBATE · 키워드 매칭 오프라인 봇 < API 불필요

소개
논쟁 FAQ
토론 대화

미국 · 실용주의

T. R. Schellenberg

1903-1970. 미국 국립기록청(NARA) 기록관리국장(1950-62). 1.2차 가치론의 창시자.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평가(appraisal) 권한을 주창하며 Jenkinson을 "old fossil"이라 불렀다.

영국 · 원칙주의

Sir Hilary Jenkinson

1882-1961. 영국 공공기록청(PRO) 부기록관장(1947-54).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1922) 저자. 증거의 신성함(sanctity of evidence)과 아키비스트의 불개입을 역설했다.

"His Creed, the Sanctity of Evidence; his Task, the Conservation of every Scrap of Evidence attaching to the Documents committed to his ch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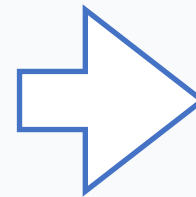
- Hilary Jenkinson, "The English Archivist: A New Profession" (1947)

"아키비스트가 판단하지 않으면, 기록청은 참고가 된다. 참고와 아카이브의 차이가 바로 평가(appraisal)이다."

- T. R. Schellenberg의 정신에 근거한 재구성

쟁점	Schellenberg	Jenkinson
평가 주체	아키비스트	기록 생산자(행정 기관)
기록 정의	선별된 2차 가치 보유 기록	자연적으로 축적된 유기적 전체
아키비스트 역할	능동적 가치 판단자	불개입 보관자(custodian)
역사가와의 관계	역사학 훈련 필수	역할 혼동 금지
진본성 근거	전문적 절차	연속적 관리(chain of custody)
이론적 배경	뉴딜 시대 기록 폭증 경험	중세 PRO 기록 관리 경험

1. 교육
2. 인물사전
3. 아카이브 콘텐츠
4. 수집, 분류, 평가, 요약, 분석, 정리, 시각화, 관계도...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

02

5가지 키워드

국회기록원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개요: 다섯 개의 축으로 본 AI 네이티브 아카이브

기록의 데이터화에서 시작해 인간-AI 협업으로 귀결되는 5개의 키워드.

01

기록의 데이터화

Records as Data

스캔·OCR을 이미지화가 아닌 구조화 데이터 생산으로 재정의. 모든 AI 서비스의 출발점.

02

상향식 계층 기술 자동화

Bottom-up Description

컴포넌트→건→철→시리즈로 이어지는 AI 기반 상향식 기술 파이프라인.

03

의정기록 수집 지능화

Intelligent Acquisition

한 자릿수에 머무는 의원실 기록 수집률을 끌어올리는 AI 어시스턴트.

04

개방형 기록 지식 서비스

FAIR-based Knowledge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맥락을 연결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전환.

05

인간-AI 협업 아카이브

Human-AI Collaboration

AI는 처리·반복, 아키비스트는 가치 판단·맥락 해석·품질 감독에 집중.

기록의 데이터화 → 상향식 기술 → 수집 지능화 → 지식 서비스 → 인간-AI 협업으로 이어지는 단일 사고 흐름.

1. 기록의 데이터화 — 모든 것의 기반

스캔·OCR을 이미지화가 아닌 구조화 데이터 생산으로 재정의한다.

01

기록의 데이터화

Records as Data

기록물 자체를 AI가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AI 서비스의 출발점.

STEP 1

구조화된 OCR/STT

단순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레이아웃·표 구조까지 추출.

예) 회의록 발언자·시간·발언 본문을 분리된 필드로 저장

STEP 2

컴포넌트 단위 메타데이터

한 문서 안에서도 단락·조문·발언 단위로 의미 추출.

예) 법안 조문별 NER로 인명·기관·법령 자동 태깅

STEP 3

임베딩 벡터화

의미 기반 검색·유사도 분석을 위한 벡터 표현으로 변환.

예) 유사 발언/유사 법안 탐색의 기반이 됨

STEP 4

지식 그래프 연결

개체와 관계를 엣지로 연결, 기록 간 맥락 복원.

예) 의원-법안-위원회-회의를 단일 그래프로 통합

포인트 '디지털화 = 이미지 만들기'가 아니다. 데이터로 다시 태어난 기록만이 이후의 모든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사례 — 회의록을 ‘데이터’로 다시 생산한다

한 회의록 PDF가 데이터화 파이프라인을 통과한 뒤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INPUT · 원본 회의록 PDF

제21대 국회 산자위 제5차 회의록

2024.03.15 · 2시간 30분 · 참석 15인 · PDF 132쪽

(위원장 김OO)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OO 위원)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박OO 위원)

중소기업 우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화
파이프라인

OUTPUT · 구조화 데이터로 다시 태어난 회의록

발언 단위 분리

발언자·시점·본문 필드

‘이OO 위원, 14:32, 반도체특별법...’ 처럼 행 단위로 저장

임베딩 벡터화

검색·유사도 기반

각 발언이 벡터로 저장되어 의미 검색·유사 발언 추천 가능

엔티티 추출 (NER)

인명·법안·기관 태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김OO 의원’ 자동 인식

그래프 연결

회의-법안-의원 연결

회의록의 발언이 관련 법안·발의자·위원회 노드와 자동 연결

2. 상향식 계층 기술 자동화 — 데이터로 기술을 만든다

컴포넌트→건→철→시리즈, AI가 개별 기록을 읽어 상위 기술을 합성한다.

02

상향식 계층 기술 자동화

Bottom-up Description

개별 기록의 내용을 AI가 읽고 종합하여 상위 기술을 자동 생성. 기술의 속도와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

시리즈 (Series)

AI 합성: 시기별 입법 흐름·정책 변천 자동 서술

철 (File)

AI 합성: 같은 사안의 회의·법안·자료 묶음 요약

건 (Item)

AI 합성: 회의 1건, 법안 1건의 핵심 요약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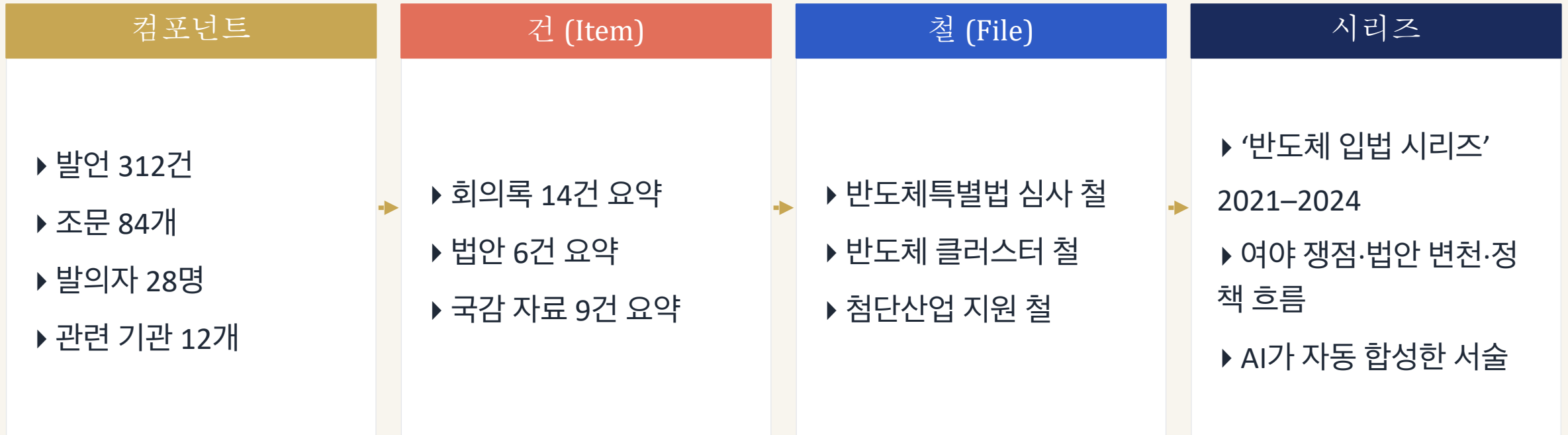
컴포넌트 (Component)

AI 추출: 발언·조문·표·발의자 등 의미 단위

포인트 상위 기술은 사람이 '쥐어짜는' 작업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합성·검증되는 산출물**이 된다.

사례 — ‘반도체 입법 시리즈’ 기술 자동 합성

여러 회의·법안·자료가 모여 시리즈 단위 서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AI 자동 합성 — 시리즈 서술 (초안)

“2021-2024년 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된 입법은 총 14건 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여당은 대기업 포함 세제 지원을, 야당은 중소기업 우선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6건의 법안 중 3건이 가결, 2건이 계류, 1건이 폐기되었다...”

3. 의정기록 수집 지능화 — 더 많은 기록을 더 잘 모은다

한 자릿수에 머무는 의원실 기록 수집률을 끌어올리는 AI 어시스턴트.

03

의정기록 수집 지능화

Intelligent Acquisition

AI가 접촉 이력 추적·자동 분류·메타데이터 추출을 지원하고, 아키비스트는 관계와 설득에 집중한다.

AS-IS · 현재

한 자릿수 수집률

- 의원실 협조 의존, 수작업 접촉
- 임기 종료 후 일괄 이관에 집중
- 메타데이터 정리에 아키비스트 시간 소진

TO-BE · AI 수집 어시스턴트

두 자릿수 이상으로

- 접촉 이력·일정·산출물을 AI가 추적
- 자동 분류·메타데이터 추출로 부담 ↓
- 아키비스트는 관계 형성·설득에 집중

1 관계 매니저

의원실별 접촉 이력·이관 일정·산출물 트래킹

2 자동 정리 엔진

이메일·드라이브·메신저에서 자동 수집·분류

3 메타데이터 추출

작성자·법안·키워드·시점을 NLP로 자동 태깅

사례 — 5대 의정기록 유형별 AI 수집 전략

기록 유형이 다르면 수집 경로와 AI 적용 지점도 다르다.

회의록 / 속기록	법안 / 의안	의정활동 (의원실)	국정감사	행정기록
<p>수집 경로 의사국 자동 연계</p> <p>AI 적용 STT, 화자 분리, 발언 단위 메타 추출</p> <hr/> <p>핵심 지표 전수 수집</p>	<p>수집 경로 의안정보시스템 API</p> <p>AI 적용 조문 파싱, 유사 법안 자동 연결</p> <hr/> <p>핵심 지표 조문 단위 검색</p>	<p>수집 경로 클라우드·이메일 자동 동기화</p> <p>AI 적용 자동 분류, 작성자·기관 자 동 태깅</p> <hr/> <p>핵심 지표 수집률 한 자릿수 → 두 자릿수</p>	<p>수집 경로 제출자료 시스템 연계</p> <p>AI 적용 Q&A 추출, OCR로 첨부자 료 텍스트화</p> <hr/> <p>핵심 지표 쟁점 단위 검색</p>	<p>수집 경로 전자문서시스템 연계</p> <p>AI 적용 문서 분류, 개인정보 자동 탐지·마스킹</p> <hr/> <p>핵심 지표 민감정보 보호</p>

수집 전략의 원칙 기록 유형이 다르면 수집 경로·AI 적용·핵심 지표도 다르게 설계한다.

4. 개방형 기록 지식 서비스 — 모은 기록을 연결하고 개방한다

FAIR 원칙을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 기록을 의정활동의 맥락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04

개방형 기록 지식 서비스

Knowledge Service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맥락을 연결하는 지식 플랫폼. 자연어 질의·지식그래프·의미검색으로 이용자와 만난다.

F Findable

표준 식별자·풍부한 메타데이터로 찾을 수 있다.

A Accessible

공인된 프로토콜로 접근할 수 있다.

I Interoperable

표준 어휘·온톨로지로 다른 시스템과 결합한다.

R Reusable

라이선스·맥락이 명시되어 다시 쓸 수 있다.

자연어 질의응답

“기후변화 관련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컸던 것?” 같은 질문에 RAG 기반 답변

출처: 회의록 단락·법안 조문 단위

지식그래프 탐색

의원-법안-위원회-회의를 연결한 그래프 위에서 의미 단위 탐색

예: 한 의원의 입법 활동 전체 맥락 보기

의미 기반 검색

키워드 일치가 아닌 임베딩 유사도 기반 의미 검색 + 패시 필터

표현이 달라도 같은 사안을 찾아낸다

사례 — 자연어 질문이 어떻게 ‘맥락 있는 답’이 되는가

이용자 한 마디 질문에 대해 시스템이 거쳐가는 5단계.

이용자 시나리오 · 자연어 QA

Q.

“기후변화 관련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컸던 것 알려줘”

A.

주요 쟁점 법안 3건을 정리해드릴게요.

- 1) 탄소중립기본법 (2021) — 감축목표율 쟁점, 결과 40%로 가결
- 2) 재생에너지특별법안 (2023) — RE100 의무화 범위, 상임위 심사 중
- 3)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2022) — 신재생 평가 간소화, 수정가결

출처: 산자위·환노위 회의록 12건, 의안 6건, 보도자료 8건

INSIDE · 처리 파이프라인

1

Query Understanding

의도·엔티티·시기·요구 형식 파악

2

Retrieval

벡터DB + 그래프에서 후보 단락 검색

3

Context Assembly

회의록·법안·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

4

Generation

RAG로 출처가 명시된 답변 생성

5

Quality Check

환각·출처 매칭·신뢰도 자동 검증

5. 인간-AI 협업 아카이브 — 아키비스트 역할의 재정의

AI는 처리·반복·추출을, 아키비스트는 가치 판단·맥락 해석·품질 감독을 맡는다.

05

인간-AI 협업 아카이브

Human-AI Collaboration

기록전문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된다.

AI · 맡는다	아키비스트 · 집중한다
대량 OCR·STT 처리 스캔본·음성·영상 등 대량 전처리	가치 판단·평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NER·분류·태깅을 일관된 기준으로	맥락 해석·서사화 기계가 잡지 못하는 정치·역사적 맥락 부여
유사·관계 자동 탐색 유사 법안·관련 발언 자동 후보 제시	AI 품질 감독·검수 환각·편향·오타깅 점검과 교정
초안 요약·기술 생성 건/철 단위 기술 초안 합성	이해관계자 관계 형성 의원실·연구자·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재정의 “AI에게 빼앗기는 직업”이 아니라, AI를 운용·감독·해석하는 직무로 진화한다.

사례 — 아키비스트의 하루, 어떻게 달라지는가

AS-IS의 단순 반복 → TO-BE의 판단·감독·관계.

AS-IS · 아키비스트의 하루 (현재)			TO-BE · AI 협업 아래의 하루		
09:00	전날 들어온 회의록 PDF 수작업 분류	반복	09:00	AI가 야간에 정리한 분류·태깅 결과 검수	감독
10:30	메타데이터 수기 입력 (제목·일자·작성자)	반복	10:30	그래프상 의심 연결 (잘못된 인명 매핑) 교정	감독
13:00	의원실 담당자에게 자료 이관 독촉 전화	관계	13:00	의원실 신규 보좌관과 직접 미팅·신뢰 형성	관계
14:30	스캔본 OCR 결과 오타 수기 교정	반복	14:30	‘반도체 입법 시리즈’ 자동 기술 초안 큐레이션	판단
16:00	키워드 태그 일괄 수기 입력	반복	16:00	역사적 맥락 노트 작성 — 기계가 못 잡는 것	판단
17:30	월간 통계 엑셀 정리	반복	17:30	신규 기증 자료 가치 평가 회의	판단

종합: 5 키워드의 구조 + 단계별 로드맵

하나의 사고 흐름이자, 동시에 단계적 도입 시퀀스로도 읽을 수 있다.

STRUCTURE



3 단계 ROADMAP

PHASE 1 · Foundation 데이터화 기반 구축 · 회의록·법안·의정활동의 ‘데이터화’ 우선 적용 · 컴포넌트 단위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 초기 임베딩·지식그래프 시드 구축	1년
PHASE 2 · Scale 수집·기술 자동화 확장 · AI 수집 어시스턴트 운영, 의원실 수집률 상승 · 상향식 계층 기술 파이프라인 정착 · 지식그래프·온톨로지 본격 활용	2년
PHASE 3 · Service & Collaboration 지식 서비스 + 인간-AI 협업 체계 · FAIR 기반 지식 서비스 일반 공개 · 외부 Open API·시민 참여 기증 서비스 · 아키비스트 직무 재정의·교육체계 확립	3년~

통합 왼쪽은 ‘무엇을 설계하는가’의 구조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언제 어떤 순서로’ 가져가는가의 로드맵이다.

03

평가와 제언

진행 중인 사항과 구축을 위한 제언

- DB 구축 사업
- 정리기술 사업
- 업무분석 및 AI 적용 가능성
- 협업 톨과 업무 생산성
- 학습과 역량강화
- AI 윤리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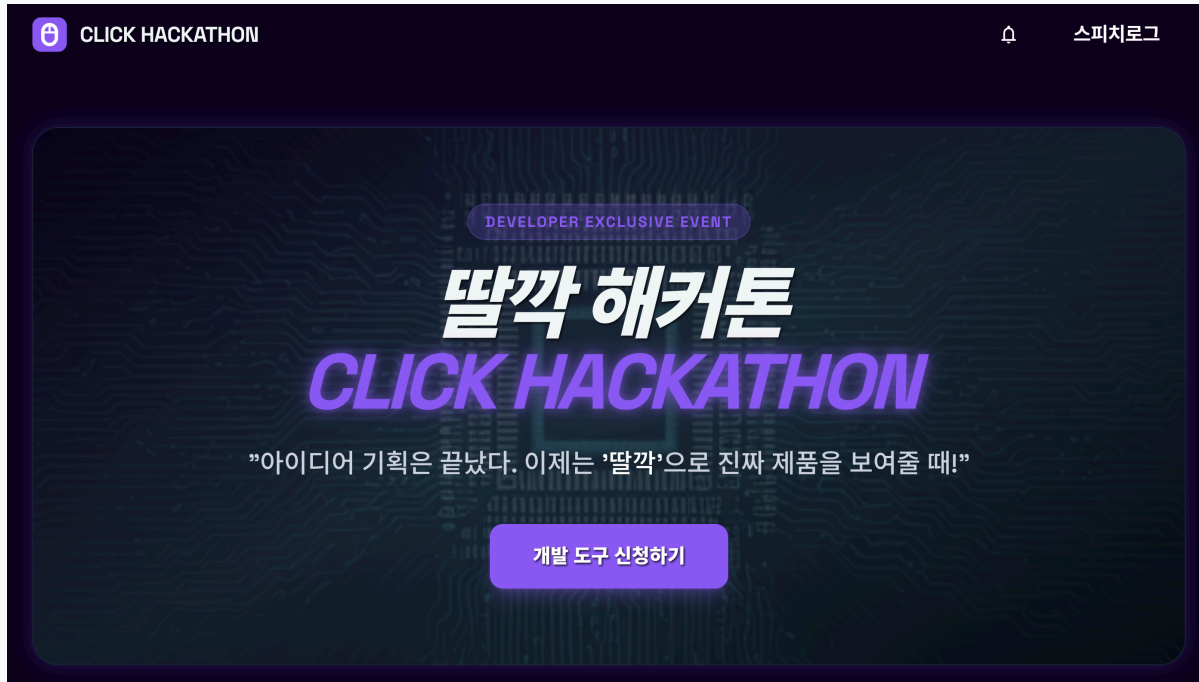
국회기록원 윤리강령

□ 전문

국회기록원은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기록원은 이 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모든 구성원의 뜻을 모아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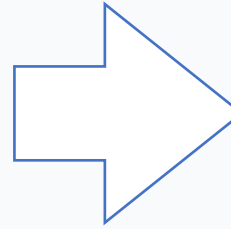
1. 국회기록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
2. 국회기록원은 기록물의 진본성·신뢰성·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3. 국회기록원은 입법, 예결산 심의, 국정감독 등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이관한다.
4. 국회기록원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폐기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화한다.9. 국회기록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물 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국회기록원은 기록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6. 국회기록원은 기록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보호한다.
7. 국회기록원은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8. 국회기록원은 국·내외 기록물관리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기록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9. 국회기록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물 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10.국회기록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과 오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설명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https://click-hackation.pages.dev/>

순번	과제명
1	실시간 여론파악
2	문체 세탁소
3	유튜브 영어자막 추출
4	좌석 예약 플랫폼
5	정부 제안서 피드백 서비스
6	관상 X MBTI
7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 데이터 관점
- XAI (설명가능한 AI)
- 보안 vs 생산성
- 폐쇄망에 대한 대응
- AI 윤리
- AI 활용 가이드라인



최초이자 선도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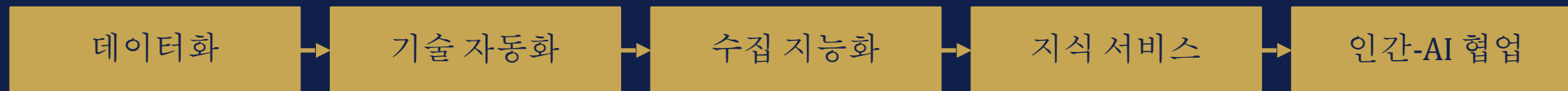
“데이터화 → 기술 → 수집 → 서비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인간-AI 협업이 있다.”

다섯 키워드는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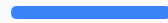
AI는 도구가 아니라 아카이브 설계의 골격이고,

아키비스트는 그 위에서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Presenters

한능우